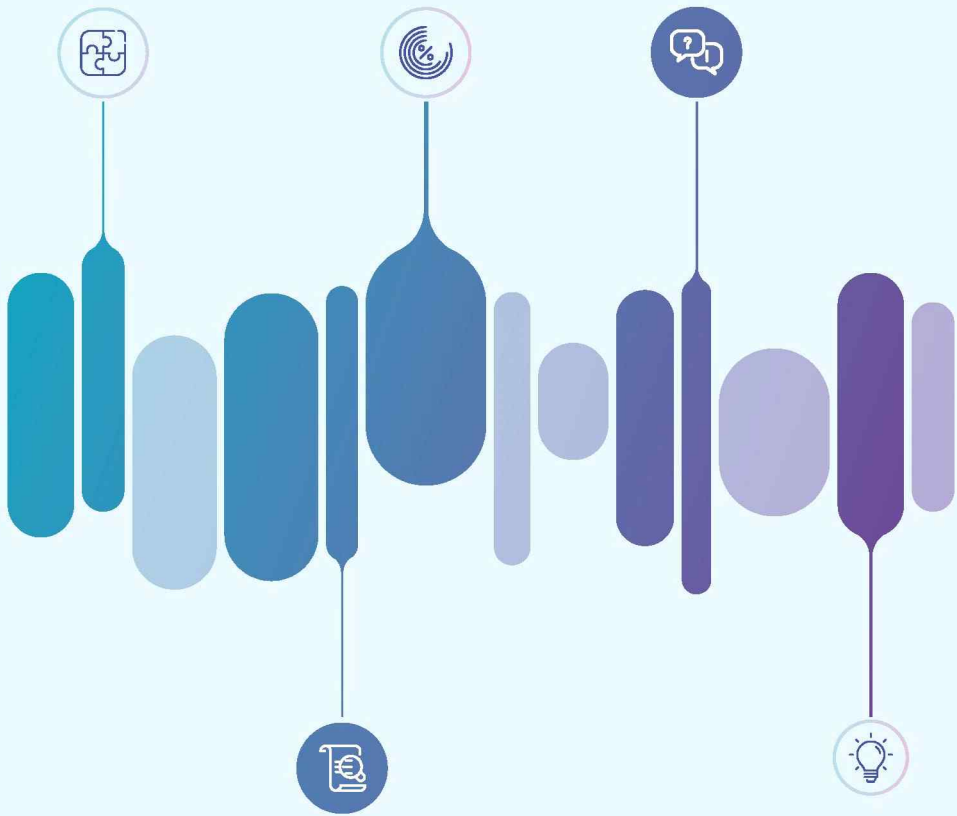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연구진

김 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희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해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통계 지표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지방행정의 필요

- 최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통계 지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지방행정 통계지표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지표 생산 부족) 광역 단위의 공공행정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 단위의 지표가 양적으로 부족
 -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 광역 단위의 데이터에 본청과 시·군·구를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개별 시·군·구 목록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는 생산되지만, 최종 지표체계로 산입되지 못한 지표들이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지표체계의 통일성 부족) 주로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의 문제로 인해 문서 형태(PDF 등)로 존재하거나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데이터가 'e-지방지표' 등 통계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못함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통계지표 현황

- 지방행정통계지표는 크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및 「지방자치법」을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현재 통계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통계플랫폼을 통하여 수집가능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관련 지방행정통계지표수는 총 359개로, 자치입법권 100개, 자치조직권 220개, 자치행정권 39개로 추산됨

□ 통계 플랫폼 현황

- 통계청의 ‘e-지방지표’,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 개방’,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의 통계플랫폼에서 지방행정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관련 플랫폼이 통일성 없이 난립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은 복수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지방행정 통계지표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PDF 등 가공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음

□ 통계 지표 제공 범위 현황

- 전체에서 시·군·구가 특정되는 비중은 90개 지표(25.1%)로 시·도(44.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동이 특정되는 비중은 19개 지표(5.3%)로 낮은 수준이었음
- 지표 수집 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가공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어 공개되는 지표(11.9%)는 전체적으로 지표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음

□ 통계 지표 제공 유형 현황

- 자치입법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률이 53.0%로 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편이었음. 또한 PDF 단독 제공 혹은 웹사이트상에서 단독 제공하는 비중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 통계청은 약 90% 정도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72.7% 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PDF 단독 제공의 경우에도 행

정안전부(20.5%)와 기타 플랫폼(20.9%)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승인 통계 현황

- 현황 분석 결과, 승인통계는 총 359개 지표 중 158개(44.0%)로, 그 중 일반 통계가 136개(37.9%), 지정통계가 22개(6.1%)였음. 승인통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자치입법권(14개, 14.0%)이었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조직권(134개, 60.9%)이었음

3.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수요 조사 및 지표 체계 제안

- 202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 30인에게 각 분야별 통계 지표 수요를 자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①다른 분야에 비해 신규제안지표(안)에 대한 필요성과 측정가능성이 높았으며, ②‘조례안 접수, 처리 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③‘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 가장 낮았으며, ④‘위원회별 청원 처리’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높고 ‘행정사무 감사결과’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주민’ 혹은 ‘조례 및 규칙’보다 ‘지방의회’ 관련하여 더 많은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지방의원과 사무기관을 중심으로 요구하였음

□ 자치조직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경우, ①‘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 가장 필요하고 측정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꼽혔으며, ②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이 가장 불필요하고 측정가능성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지표로 꼽혔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관련된 지표 및 ②읍면동 관련 통계지표의 양적·질적 확대, ③교육, 경찰, 치안 등 다방면의 정책분야지표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④지표의 신뢰성은 높지만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경우, 기존 지표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진은 세 가지 지표만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지방 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이 가장 필요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나타났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방행정 유관기관의 인사관리 지표의 양적 추가, ②현재 관리 중인 지표에 대한 세분화, ③인력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의 공개가 요구됨

□ 자치행정권

-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의 지표가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지지를 받음
- 자치행정권 분야는 향후 ①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배분과 관련된 신규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②각급 행정기관별로 관련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고 ③생활인구, 사무위탁,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및 민관거버넌스와 같이 지방행정에서 최근 각광받는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제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4. 결론 및 기대 효과

□ 지방 통계 지표의 개선 방안

- 전반적으로, ①지표의 양적 부족, ②지표 체계의 효율성 부족, ③지표 제공 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④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표 제공, ⑤자치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및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드러남
- 향후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통계 체계 관련하여 ①자치입법권 및 자치행정 권 관련 지표의 추가 개발, ②지표 제공 유형 및 범위의 개선을 통한 지표체계 비효율성 개선, ③신뢰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 연구의 기대효과

- 지방자치총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분권 및 자치행정 관련 지표(indicator)의 수집을 토대로 향후 지방분권 지수(index)로의 발전 토대로 활용

Contents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6
3. 연구의 흐름(요약)	8

제2장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1
1. 정부 정책 및 이론적 논의	11
2. 지방행정 통계 현황 분석 개요	12
3.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 제시	12
제2절 정부 정책 및 이론적 논의	14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의의	14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쟁점	17
3.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분류	20
제3절 통계 플랫폼 현황	26
1. 통계청	26
2. 행정안전부	33
3. 교육부	43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48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9
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49

제4절 통계 지표 현황	54
1. 지방행정 관련 통계 지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분류 체계	54
2. 지표 분류별·통계 플랫폼별 지표 수	57
3. 자료 유형별·지표 범위별·통계유형별 지표 수	59
제5절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 설정	64
1. 통계 플랫폼에 대한 평가	64
2.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한 현존 통계 지표의 평가	64
3.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의 실시	66

제3장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 수요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제1절 분석의 개요	69
제2절 기존 통계지표 평가 조사	73
1. 통계플랫폼에 대한 평가	73
2. 기존 통계지표에 대한 평가	77
제3절 새로운 통계지표 수요 조사	105
1. 자치입법권	105
2. 자치조직권(집행기관)	106
3. 자치조직권(인사관리)	108
4. 자치행정권	108
5.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 종합	111
제4절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116
1. 통계 플랫폼	116
2. 자치입법권	118
3. 자치조직권	121
4. 자치행정권	129

제4장 |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7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137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지표 체계 제안	140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43
1. 연구의 의의	143
2. 연구의 한계	143
3. 연구의 활용	145

【참고문헌】	147
---------------------	------------

【부록】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149
---	------------

표목차

〈표 2-1〉 자치권 분류 및 관련 법령	23
〈표 2-2〉 e-지방지표 지표체계도	27
〈표 2-3〉 e-나라지표 행정안전 및 지방 관련 지표	33
〈표 2-4〉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목록	35
〈표 2-5〉 행정안전통계의 지방행정 관련 지표	35
〈표 2-6〉 내고장알리미 제공 주요지표	38
〈표 2-7〉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	39
〈표 2-8〉 지방재정365 지표 공개정보 및 공개주기	41
〈표 2-9〉 교육통계서비스의 주요 지표	45
〈표 2-1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주요 지표	47
〈표 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표체계도	49
〈표 2-12〉 지방행정 통계 서비스 플랫폼 종합	51
〈표 2-13〉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의 현황 파악 분류 체계	55
〈표 2-14〉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각 카테고리별 지표 수	57
〈표 2-15〉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 플랫폼별 지표 수	58
〈표 2-16〉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자료 제공 유형(카테고리별)	60
〈표 2-17〉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자료 제공 유형(통계 플랫폼별)	60
〈표 2-18〉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제공 범위(카테고리별)	62
〈표 2-19〉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승인통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현황	63
〈표 3-1〉 전문가 자문 집단의 구성	69
〈표 3-2〉 기존 지표 평가 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70
〈표 3-3〉 새로운 지표 수요 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71
〈표 3-4〉 통계플랫폼의 신뢰성 평가 순위	74

〈표 3-5〉 통계플랫폼의 접근성 평가 순위	75
〈표 3-6〉 통계플랫폼의 지표활용도 평가 순위	76
〈표 3-7〉 자치입법권 관련 기존 통계지표	78
〈표 3-8〉 자치입법권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82
〈표 3-9〉 자치입법권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83
〈표 3-10〉 자치입법권 기존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85
〈표 3-11〉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기존 통계지표	86
〈표 3-12〉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89
〈표 3-13〉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91
〈표 3-14〉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92
〈표 3-15〉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기존 통계지표	93
〈표 3-16〉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96
〈표 3-17〉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97
〈표 3-18〉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존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99
〈표 3-19〉 자치행정권 관련 기존 통계지표	100
〈표 3-20〉 자치행정권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101
〈표 3-21〉 자치행정권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102
〈표 3-22〉 자치행정권 기존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103
〈표 3-23〉 자치입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105
〈표 3-24〉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107
〈표 3-25〉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108
〈표 3-26〉 자치행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109
〈표 3-27〉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	111
〈표 4-1〉 각 분야별·항목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표	14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	8
〈그림 2-1〉 KOSIS ‘지자체 기본통계’의 지자체별 지표제공 형태 비교	32
〈그림 2-2〉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현황	42
〈그림 2-3〉 게임물배급업 인허가 데이터	43
〈그림 2-4〉 기초의회 징계 통계표	50
〈그림 3-1〉 기존 지표 및 새로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과정	71
〈그림 3-2〉 각 분야별 통계지표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평가	104
〈그림 3-3〉 각 분야별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종합	110
〈그림 4-1〉 각 분야별 현황 분석에 대한 제안	139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기반행정의 대두

- 지방 차원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필요성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370호, '20.6.9. 제정 및 '20.12.10. 시행)에 의거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데이터 공유·분석 및 정책활용을 위한 데이터 체계 구축을 추진 중임
 -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데이터 표준화 및 데이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이 특히 중요하게 여겨짐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위치 파악, 중앙-지방 간의 효과적 협력, 예산·인력 등 재원의 효율적 배분, 환경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가능함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지표체계의 개선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지표의 양적 부족
 - (지표 생산 부족) 광역 단위의 공공행정 데이터는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기초 단위의 행정 일반·자치분권현황·지방의정·주민참여 등에 대한 지표가 양적으로 부족
 - * 예를 들어 광역 단위의 조직·인사 관리 지표는 퇴직, 포상, 징계, 평균승진소요년수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총괄현원을 제외한 기초 단위의 조직·인사 관리 지표는 생산되지 않거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야 알 수 있는 등 접근성이 낮은 상태

-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 광역 단위의 데이터에 본청과 시·군·구를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개별 시·군·구 목록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는 생산되지만 최종 지표체계에 산입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하여 효율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행정안전통계연보」의 광역 단위 지표 중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기관 등은 본청과 시·군·구가 나뉘어 제시되고 있으나 시군구별 통계는 없음. 또한 주민투표 역시 시·군·구를 구분하여 사건명과 투표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리된 통계가 부재함

○ 지표체계의 통일성 부족

- 주로 지표 가공 및 유통 부족의 문제로 인해 문서 형태(pdf 등)로 존재하거나 개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데이터가 「e-지방지표」등 통계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실정임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제도 관련 통계 연구 부족

- 지표와 통계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주로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거나 지역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이며 지방행정 및 자치분야의 연구는 매우 부족함
- 본 연구는 분포되어있는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관련 통계지표의 현황을 살펴보고 신뢰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 연구에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안하는 연구로서 차별성을 지님

2. 연구의 목적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승인통계의 종류 등 생산 현황 조사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승인통계의 생산자, 생산과정, 시·공간

적 범위 등 현황을 1차적으로 파악

- * 시·군·구를 구분하여 제시되는 지표 등 '가공 및 유통 부족 지표' 중점 검토
- 「e-지방지표」등 통계 플랫폼, 「행정안전통계연보」 등 정부부처 발간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지자체별 자체 생산 통계지표는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 * 재정지표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일부 분권제도 관련 지표는 포함
- * 대표사례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지표 대표 사례와 다수 지표를 생산하는 지자체 대표 사례를 각각 선별함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 수요 조사 및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

-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통계지표의 발굴 및 제안
 - 신규지표 예시로는 주민 감사 청구 건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지방의회 부패관련 지표(기소, 체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현황, 읍면동장 임명방식, 지역·지방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 등이 있음
- 제안된 통계지표의 생산 및 서비스 전략 제언
 - 현 정부의 데이터기반행정 기조와 연계한 통계청 승인통계화 전략 및 로드맵, 관련 법·제도 개선안 등을 검토하며 향후 '지방자치 총조사'(가칭) 등으로의 발전 가능성 탐색
-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의 신뢰성을 높임
 - 문헌연구, 브레인스토밍, 설문조사 등을 활용함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현황 분석) 2017년 이후 생산된 통계지표 대상으로 조사

- 최근 5년 간 생산된 통계지표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현행 체계와 연속성 있는 지표체계를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요 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중심으로 조사 및 제안

-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제안은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다만, 현황 조사 과정에서 광역 단위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전수 조사하여 기초 단위 통계지표체계에 대한 시사점 도출함. 읍·면·동 수준의 지표는 시사점 도출 가능할만한 특이 지표에 대해서만 조사함

2. 연구방법

□ 문헌 분석

- (현황 조사) 온·오프라인 문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파악
 -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지표를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조사

□ 브레인 스토밍

- (수요 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원 대상 브레인스토밍
 - 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게 업무 현장에서 체감한 특정 통계 지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집단적·창의적 발상 기법인 브레인스토밍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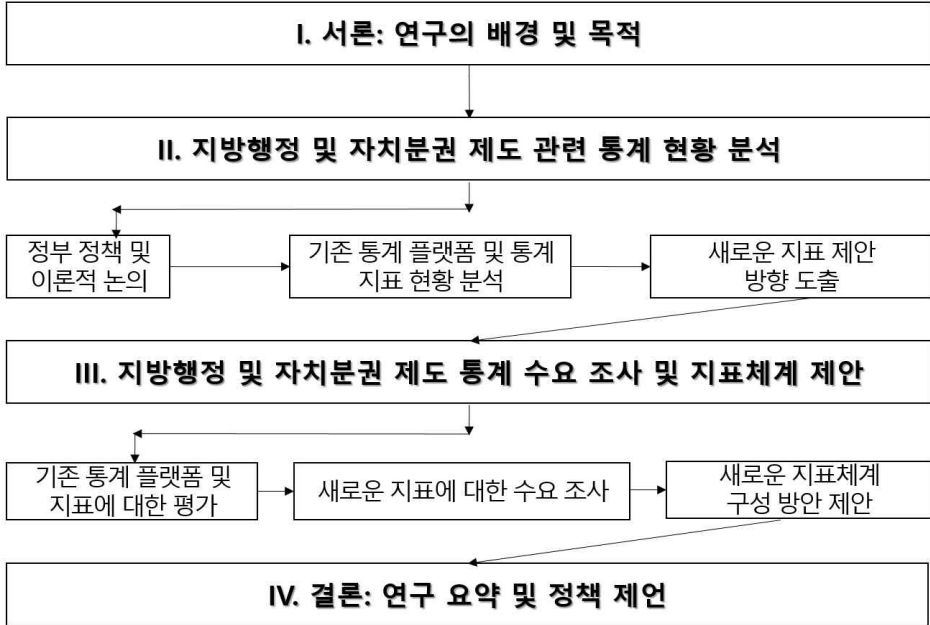
- 해당 통계지표의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가능한 많은 숫자의 발상을 이끌어냄을 목적으로 함

□ 설문 조사

- (현황조사)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지표를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자문 실시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기존 통계의 신뢰성·접근성·지표 활용도를 파악하여 통계 플랫폼 및 분야별 개선 필요성의 정도를 분석
- (수요 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전문가 대상 현재 통계 지표 외 필요한 지표에 대한 주관식 설문 실시
 - 새로운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지표체계의 비전, 생산이 요구되는 개별 지표의 제시, 현재 지표 생산이 미흡한 정책 분야 등에 대한 개방형 설문(open-question) 실시

3. 연구의 흐름(요약)

〈그림 1-1〉 연구의 흐름



출처: 연구진 작성

제 2 장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정부 정책 및 이론적 논의

제3절 통계 플랫폼 현황

제4절 통계 지표 현황

제5절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

제2장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 정부 정책 및 이론적 논의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의의

- 지방행정통계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등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통계분석 현황의 필요성 및 현행 통계 분류 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함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쟁점

-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 플랫폼의 적절성,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통계 지표 제공 범위의 현황 파악, EXCEL, CSV 등 가공가능한 통계 지표 제공 유형, 통계의 신뢰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 등이 쟁점으로 부각됨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분류

- 관련 통계의 분류 체계가 통계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이며,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와 관련된 통계지표 체계의 새로운 분류가 필요한 이유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으로 구분한 분류 체계 제시함

2. 지방행정 통계 현황 분석 개요

□ 지방행정 통계 생산 플랫폼 현황 파악

-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생산 플랫폼의 통계지표 분류 기준 및 지방행정 관련 지표의 제공 여부 파악

□ 지방행정 통계 지표 분류별 현황 파악

-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한 후 통계 제공 현황을 파악
- 제공되는 자료의 형태별 유형 분류(예: EXCEL, PDF 등),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예: 시군구, 시도)등을 파악하여 통계지표 접근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 시행

3.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 제시

□ 통계 플랫폼에 대한 평가

- 지방행정 통계 관련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조사

□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 한 현존 통계 지표의 평가

- 현재 통계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는 복수의 직관적 분류체계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가치를 함양하는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민간인·일반 국민을 위한 통계 대중화의 경향성 확인되므로, 기존 지표의 접근성과 지표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필요
-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누락·소실 되는 통계 지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표 제공 형태 및 지표 제공 범위의 수정과 승인·지정통계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제시

□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의 실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의 불균형이 확인되므로, 자치조직권 중에서도 인사관리의 경우 기존 플랫폼을 기준으로 통계 제공 유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가장 지표수가 적은 자치행정권 분야의 경우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안)을 제시함
- 일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계 지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확인되므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표(안)을 구성함

제2절 정부 정책 및 이론적 논의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의의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도 정립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계 지표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지방행정통계는 전국단위의 통계를 지역별로 작성하는 통계와 지역의 필요성에 의해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특성 통계)로 구분됨.
 - 지방행정통계는 또한 작성 주체에 따라 직접 작성하는 자료와 취합하여 보고하는 자료로 구분될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중앙보고 통계와 내부관리 통계로 구분됨
- 지역통계의 사전적 정의는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 분석 및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지역단위의 공간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하는 통계’를 의미함(김정민, 1995)
 -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시대를 넘어 지방분권 및 지방민주주의, 지역 다양성 등을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보다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이하 지방통계 혹은 지방행정통계)’라는 단어를 사용함
- 특성화통계를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작성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하여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간의 비교 등을 위해 지방행정 및 분권 관련 통계 지표가 전국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고, 특성 통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음
- 일부 지역의 경우 대표 통계를 마련하여 타당성 및 사후관리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으나(이강진 외, 2012), 인력 및 조직의 연속성으로

인해 적합성, 명료성,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등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바 있음

- 대표 통계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 한정된 시도만으로는 지속적인 관리 등이 어렵고 궁극적으로 통계청장의 승인이 없이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음

□ 최근 통계분석 현황의 필요성

- 통계지표와 관련된 논의는 2010년대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통계 지표가 아닌 데이터 자체의 흐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며 다소 흐름이 끊긴 바 있음
 - 최근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의하면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자체 데이터의 확보 및 관리 개선이 필요함(이재용 외., 2021)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 강조되고 있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플랫폼을 분석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이 가능해질 수 있음
-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체제와 경제논리로 인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불충분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통계 지표의 축적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함(김동욱, 1999)
 - 현재 공표되고 있는 지역통계의 수는 지역의 각종 발전계획이나 정책수단의 개발에 이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진재현, 2013)
- 새로운 지방통계지표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자체가 신속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정보추출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음. 지방의 자연자원, 인적자원, 사회적자원 등을 파악해야 해당 지역의 잠재력 및 개발가능성을 알 수 있음

-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통계를 발굴하는 수요체계 파악 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운영상의 개선 노력을 위한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현행 통계 분류 체계 논의

- 현 국가통계체계(National Statistical System)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필요할 때마다 관련 통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체계가 불완전하고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특성이 있음(이인실, 2012)
 - 우리나라 근대 통계의 시발점은 ‘호구조사 규칙’이 시행된 1896년 9월 1일이며, 한국통계학회는 1971년에 설립되었고 통계청은 1990년에 청 단위의 조직으로 승격하였음
 - 통계이론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통계 체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임. 이는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반면, 통계의 정확성·신뢰성·효율성 체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기 때문임
- 통계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발전은 지속되었으나 통계에 대한 사회적·기술적 수요는 충족되지 못하여 통계 생산 체계가 아닌 통계 제공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높은 실정임
 - 통계의 작성 기능이 국가 내에서 어떻게 분산되어야 하며 어떤 절차를 통해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
 - 통계 작성 기획, 조사, 집계, 공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정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만한 요인에 대한 현황 조사가 요구됨
-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분산형 통계체제란 통계활동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각 기관이 필요한 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형태(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
 - 장점으로서는 각 기관별로 필요한 통계를 비교적 신속하게 얻을 수 있고, 업무상 전문지식을 통계작성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꼽힘

- 단점으로는 통계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고, 통계전문가가 참여치 않을 경우 통계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꼽힘
-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고용통계, 농어업통계 등 주요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일본에 비하여 집중형 통계제도의 요소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쟁점

□ 통계 플랫폼

- 현재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이 ‘e-지방지표’, ‘e-나라지표’ 등 다양한 통계 플랫폼을 통해서 지방행정 관련 통계를 제공 중임
 - 그러나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의 입장에서 지표의 접근성·신뢰성·활용가능성 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음
 - (접근성) IT 및 빅데이터의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를 검색, 분류, 통합하는 방법과 과정이 현재 통계지표체계에 적용되고 있지 못함. 대부분의 통계지표는 구글(google)등의 검색엔진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신뢰성) 예를 들어, 승인통계의 경우 통계지표의 생산 및 공표 과정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보니 통계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음
 - (활용가능성) 행정안전부의 경우 다수의 통계지표를 보고서(PDF) 형태로 발간하면서 실제 정책 결정자들이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 세트(data-set)를 구축하기가 어려움
- 각 통계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관련 지표의 현황과 이에 대하여 실제 지표를 활용하는 전문가 집단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요구됨

□ 통계 지표 제공 범위

- 통계 지표 제공 범위란 해당 통계가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제공되는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지 등 통계지표가 제공되는 자치단체 수준을 의미함
-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분산형 통계체제로 인한 장점도 존재하지만, 통계에서 중요한 소지역 통계인 읍·면·동 통계가 매우 적다는 단점이 부각됨(양영철, 2016)
 - 형식적으로는 분산형 통계체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집중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통계의 작성·분석·공표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임
- 기존 ‘지역통계’ 관련 문헌이 대부분 통계지표의 본격적인 온라인 데이터화가 진행되기 이전인 2015년 이전의 연구임에 따라, 2022년 현재 지방행정 통계의 지표 제공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최근 근황에 대한 분석 요구됨

□ 통계 지표 제공 유형

- 통계 지표 제공 유형이란 해당 통계가 가공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되는지(CSV, EXCEL 등) 혹은 문서 형태(PDF, HWP)로 제공되는지, 아니면 웹사이트 내에서만 제공되는지 등 통계지표의 접근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음
 - 지방행정통계의 가장 큰 문제로 신뢰성, 충분성, 활용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실시간(real-time) 접근성이 요구되는 데이터행정 시대에는 통계 지표 제공 유형과 결부된 접근가능성 내지 활용성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실제 정책결정에 활용이 어려운 현재 통계지표 제공 유형은 통계지표 제공 범위와 함께 현재 지방행정통계 체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며, 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제시가 요구됨

□ 승인 통계¹⁾

- 통계작성 승인제도의 취지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통계작성의 효율성,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임
 - 승인 요건으로는 기승인 통계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을 것, 통계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것이 요구됨 (「통계법」 제18조)
 - 취소 요건으로는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개선요구(「통계법」 제12조)를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분류 미적용 통계, 활용도가 낮은 통계, 기승인 통계와 동일·유사한 통계, 표본규모 과소 등으로 신뢰성이 낮은 통계,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작성한 통계(영리목적) 등이 꼽힘(「통계법」 제19조)
- 통계작성 승인(협의) 사항은 명칭, 종류, 목적, 사항, 대상, 기준시점, 기간, 주기, 방법, 자료수집체계, 분류, 기준, 조사표, 보고서식, 공표서식, 국제기준 준수 여부임
- 승인 통계의 일반적인 심사기준은 통계작성의 승인은 새로운 국가통계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공익성·연속성·절차성 및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며, 통계작성승인 심사는 조사통계,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별로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내용 및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함
 - 조사통계는 대부분 표본조사이고 조사결과를 추정하므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표본 설계내역에 대해 중점 심사함. 예를 들면 추정결과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범위 기준 설정 등이 심사 대상이 됨
 - 보고통계는 통계법상 통계의 정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며, 가공통계는 기초 자료의 신뢰성 여부 및 가공기법 등을 심사함

1) 해당 내용은 통계청(2022), 「통계조정업무매뉴얼」을 주로 참조함

3.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의 분류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총 12장, 제211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지방자치법」 제1조)
 - 2021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러한 전부개정은 1988년 해당 법 시행 이후 두 번째의 실질적 전부개정임
 - 「지방자치법」은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지방행정의 발전 및 인구감소·산업구조재편 등 환경변화를 담았으며, 기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의를 가짐
 - 특히 주민 주권, 기관구성 다양화, 지방의회 책임성,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 자치분권에 관련된 논의를 담고 있어 새로운 지방행정통계지표 분류 체계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으로, 총12장, 제83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지방공무원법」 제1조)
 - 1963년 제정된 뒤 2010년 3월 법률 제10147호까지 35차례 개정되었다. 「지방공무원법」은 상황 변화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어 왔으며, 2008년에는 전면 개정됨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1963년 11월 1일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제수당지급규정 등 법상의 위임입법사항 및 세부시행요령에 관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서 일원화된 법령체제의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워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었음(행정안전부, 2021²⁾) 따라서 새로운 지방행정 통계지표 체계를 제안할 때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리로, 헌법 제117조 1항에 근거함
 - 자치입법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인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권한인 규칙제정권이 존재함
 - 자치입법권은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자치입법권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지방의회까지 외연을 확장하여 연구함
-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보수·사무 분장 등을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리로, 집행기관에 대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음
 - 지방행정 수행수단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조직체계를 자주적으로 정하

2) 행정안전부.(2021)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는 권능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행정기구 설치권과 정원관리권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부합하는 지자체 조직을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임
- 2003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을 통하여 지방분권 촉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동년 새롭게 개발한 표준정원산식을 통해 표준정원제의 시행으로 자치조직권이 대폭 확대되었음
-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함

- 자치행정권이란 자기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질서의 유지, 생활환경의 정화 등을 위해서 권력작용 및 관리적 작용을 할 수 있음
 - 자치행정권에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운영권을 포함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업무를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정책영역, 즉 민관간의 거버넌스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기로 함

□ 자치재정권의 제외

- 자치재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자율적으로 조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칭하며, 자원조달의 자율권, 자원사용의 결정·운용상의 자율권, 재산관리권 등으로 구분됨
-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이 소비할 지역공공재를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자신들의 부담으로 공급하는 자기책임의 원칙, 공공재의 공급과 비용의 연계 원칙 등과 관련되어 있음
- 그러나 자치재정권의 경우 소요 자원 및 유효 재량권에 관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과 달리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난립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자치재정권 관련 지표를 나머지 세 분

야에 고루 담되, 자치재정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수의 지표는 후속 연구에 맡기도록 함

〈표 2-1〉 자치권 분류 및 관련 법령

자치권 분류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지방자치법」제5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경계변경	「지방자치법」제6조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지방자치법」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지방자치법」제11조
자치입법권	주민	주민투표	「지방자치법」제18조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지방자치법」제19조
	주민	규칙의 개정과 제정, 폐지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제20조
	주민	감사 청구	「지방자치법」제21조
	주민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제22조
	주민	주민소환	「지방자치법」제25조
	주민	정보공개	「지방자치법」제26조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조례와 규칙	조례 위반	「지방자치법」제26조
	선거	선거 결과	「지방자치법」제36조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지방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의회	지방의원 체포(부패)	「지방자치법」제113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지방자치법」제49조~제51조

자치권 분류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지방자치법」제47조~제48조, 제52조
	지방의회	소집과 회기	「지방자치법」제53조~제56조
	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제57조~제63조
	지방의회	부의장	「지방자치법」제57조~제63조
	지방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법」제64조~제71조
	지방의회	회의	「지방자치법」제72조~제84조
	지방의회	청원	「지방자치법」제85조~제88조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지방자치법」제89조~제93조
	지방의회	질서	「지방자치법」제94조~제97조
	지방의회	징계	「지방자치법」제98조~제101조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지방자치법」제102조~제104조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제105조~제122조
	집행기관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지방자치법」제123조~제125조
	집행기관	자치경찰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소방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교육훈련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보건진료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시험연구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지방자치법」제126조
	집행기관	사업소	「지방자치법」제127조
	집행기관	출장소	「지방자치법」제128조
	집행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129조
	집행기관	자문기관	「지방자치법」제130조
	집행기관	읍,면,동장	「지방자치법」제131조~제133조
	집행기관	읍,면,동사무소	「지방자치법」제134조
	집행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지방자치법」제134조
	집행기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자치법」제135조

자치권 분류	대분류	소분류	관련 법령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지방자치법」제164조~제168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법」제169조~제17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방자치법」제176조~제181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지방자치법」제182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사무 위탁	「지방자치법」제168조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제199조~제211조
	주민참여	주민참여 행정	「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
자치조직권	인사관리	정원/현원/조직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8조
	인사관리	임용	「지방공무원법」 제25조~제28조
	인사관리	의원면직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인사관리	승진	「지방공무원법」 제38조~제39조의3
	인사관리	파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인사관리	수당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46조의3
	인사관리	부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73조의3

출처: 연구진 작성

제3절 통계 플랫폼 현황

1. 통계청

-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은 국내·지역·국제·북한 등 국내외 모든 공공개방 데이터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One-Stop 통계 서비스임
 - 1991년 통계청은 국가행정기관 대상 국가통계DB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를 KOSIS(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로 명명하였음
 - KOSIS의 운영 근거는 「국가통계포털(KOSIS) 운영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 제576호, 시행)」으로 국가통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통계포털의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2021년 4월 20일 시행됨
 - 2010년 이후 e-지방지표 시각화서비스(2018), 챗봇 서비스(2021) 등 이용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다각화에 힘쓰고 있음
- KOSIS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사/공단, 연구기관 등 300여 개 기관이 작성하는 경제·사회·환경 관련 1,000여 종의 국가승인통계를 수록하고 있음(KOSIS, 2022)
 - 경제·사회·환경 등 30개 분야에 걸쳐 주요 국내통계를 제공하는 국내통계, 지역자치단체의 생활환경 및 경영상황 관련 통계지표를 제공하는 e-지방지표 외에도 국제통계, 북한통계 등을 다루고 있음

1) 「e-지방지표」(<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e-지방지표」는 지역의 발전, 지역인의 삶의 질 등 지역의 현황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지역단위 통계 서비스임

○ 「e-지방지표」는 현재 생산되는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단위 국가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건강, 교육, 환경 등 12개 분야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서비스하고 있음

- 인구(19), 가족(13), 건강(16), 주거와 교통(26), 소득과 소비(12), 고용과 노동(17), 교육(14), 문화와 여가(10), 안전(20), 사회통합(21), 성장과 안정(32),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6), 환경(생활환경과 오염)(6), 환경(생태환경과 자연자원)(2), 일자리상황(25), 삶의 질(52), 저출산·고령화(15) 등 총 306개의 지표가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표는 <표 2-2>와 같음

〈표 2-2〉 e-지방지표 지표체계도

구분	지표	
인구 (19)	인구구조	고령인구비율, 평균 초혼연령, 평균 재혼연령, 남녀성비, 노령화지수
	인구변화	사망자수, 순이동인구, 등록외국인 현황, 인구 천명당 외국인수, 인구증가율, 전입인구, 전출인구, 주민등록인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추계인구, 인구총조사 인구
	산업인구	농가인구, 여가인구
가족 (13)	가구형성	1인가구비율, 신혼부부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혼인형태, 조이혼율, 이혼건수
	가족관계	생활여건의 변화,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독거노인가구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부모 생활비 주제공자
건강 (16)	건강상태	EQ-5D 지표, 주관적건강수준 인지율, 기대여명
	건강행태	결핵신고 신환자수,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음주율, 비만유병률,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건강생활실천율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수술인원,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수, 의료서비스 만족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미충족의료율
주거와 교통 (26)	주거공급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주택보급률, 주택수, 토지거래 면적
	주거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주택 매매가격변동률, 주택 매매가격지수, 주택 월세가격지수, 주택 월세통합가격지수, 주택 전세가격지수, 지가변동률

구분		지표
주거와 교통 (26)	주거환경	노외주차장현황, 도로포장률,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확보율, 도시지역면적,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교통안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통문화지수
소득과 소비 (12)	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주관적 소득수준, 농업소득, 소득만족도
	소비	1인당 민간소비지출액, 소비생활만족도
	자산	농가부채, 예금은행 대출금액, 예금은행 예금액
	물가	소비자물가 등락률, 소비자물가지수
고용과 노동 (17)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취업자수, 실업자수,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취업자증감, 구인배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경력단절여성인구
	근로조건	근로여건 만족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수,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상용직 비중, 임금상승률
교육 (14)	교육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대학교 교원수, 대학교 학생수, 유치원 교원수, 유치원 원아수, 초등학교 교원수, 초등학교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기회	유치원수,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 대학교 수, 초등학교수
	교육효과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의 효과
문화와 여가 (10)	문화여가 활동	국내 관광여행 횟수, 해외여행 경험 및 횟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현황, 여가활용 만족도,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문화여가 자원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도서관 현황
안전 (20)	범죄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 발생 건수,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중요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사고	주민 만명당 화재발생 건수, 화재발생 건수, 뺑소니 교통사고율, 아동 십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 자연재해피해현황, 어린이 교통사고건수, 노인 교통사고건수
	안전평가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안전관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소방서 1개서당 담당 주민수,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지역안전등급 현황,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 주민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지정현황,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사회통합 (21)	사회보장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급여형태별 요양급여 실적,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요양기관수

구분		지표
사회통합 (21)	사회복지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현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인구 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수,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체 비율,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비율, 일반회계중 사회복지예산 비중, 등록장애인수
	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인구 천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일반회계중 일반공공행정예산 비중, 재난 재해 관리기금 현황
	삶의 만족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삶의 만족도
	사회참여	사회단체 참여율,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기부율
성장 과 안정 (32)	성장	GRDP(시도), 1인당 GRDP, 경제성장률, 특히 출원건수
	건전성	어음부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방세
	전산업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종사자수, 창업기업수, 가구수, 종사자수
	농어업	어가수, 농가수, 친환경인증 농산물 출하현황, 친환경인증 축산물 출하현황
	광공업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사업체수, 제조업종사자수, 제조업생산 증감률
	서비스업	대형소매점 판매액, 도소매업사업체수, 도소매업종사자수, 백화점 판매액, 서비스업사업체수, 서비스업종사자수, 운수업사업체수, 운수업종사자수
	국제화	수입액, 수출액
환경 (기후변화와 에너지) (6)	기후변화와 에너지	기온, 강수량, 최종에너지 소비량, 도시가스 보급률, 전력판매량, 미세먼지 인식도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6)	생활환경과 오염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일반폐기물 재활용률,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
	환경의 질	녹지환경 만족도, 녹지율
환경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개발제한구역, 논 경지면적
일자리 상황 (25)	일자리 현황	고용률, 실업률, GRDP(시도),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취업자수, 경제활동참가율, 구인배수, 실업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경력단절여성인구

구분		지표
일자리 상황 (25)	일자리 창출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창업기업수, 취업자증감
	일자리 질	비정규직근로자 비율, 상용직 비중, 임금상승률
	경제지표	소비자물가 등락률, 수출액, 수입액, 경제성장률, GRDP(시도), 1인당 GRDP, 제조업생산 증감률
삶의 질 (52)	인구·가족	인구증가율, 1인가구비율, 가족관계 만족도, 독거노인가구비율, 생활여건의 변화
	건강·교육	연간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흡연율, 주관적건강수준 인지율,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교육의 효과, 의료서비스 만족도, 비만유병률, 건강생활실천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미충족의료율
	소득·소비·성장	소득만족도, 주관적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1인당 GRDP, 소비생활만족도,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지역총소득
	고용·노동	고용률, 실업률, 근로여건 만족도, 임금상승률
	주거·여가·문화	주택보급률, 주택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수,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여가활용 만족도, 노후주택비율, 빈집비율, 도서관 현황, 일반가구의 주택소유율
	안전·환경	인구 천명당 범죄발생건수,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녹지환경 만족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미세먼지 인식도,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녹지율
	사회통합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삶의 만족도, 인구 십만명당 자살률, 등록장애인수
저출산/ 고령화 (15)	인구	고령인구비율, 노령화지수, 평균 초혼연령, 인구증가율, 출생아수
	가족·건강	혼인건수, 독거노인가구비율, 기대여명, 이혼건수, 다문화 혼인건수, 신혼부부수
	고용과 노동	고용률, 실업률
	사회통합	요양기관수,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

출처: e-지방지표(<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 e-지방지표는 주제별, 지역별 및 테마별로 분류하여 통계지표를 서비스하여 이용자의 이용 편의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예컨대 2022년 11월 기준 테마별 지표로 일자리 상황, 삶의 질, 저출산

고령화가 분류·제공되고 있으며 각 테마별 상세 지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함

- 「e-지방지표」 외에도 KOSIS 내 ‘지역통계’ 분류에서 지자체 기본통계, 인구 및 사회(사회조사), 인구 및 사회(사회조사 외), 경제 및 산업경제 및 산업 등 지역 관련 통계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지자체 기본통계’의 경우 토지·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기타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정보통신, 보건·사회보장, 환경, 교육·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사법 등 17개 부문의 380여 개의 기본 통계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서비스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가 위와 같은 주제 분류 방식으로 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상 통계지표의 표와 시각화 제공, EXCEL(xlsx, xls), CSV, TXT 형태로 다운로드 및 TXT 파일 형태로 메타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경우 PDF 파일 형태로만 서비스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특징을 보임(<그림 2-1>)³⁾
- 2018년에는 e-지방지표 시각화 서비스⁴⁾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지표 활용도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3) 예컨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본통계’의 경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DF 파일 형태로만 지표를 제공하고 있어 지표의 자유로운 재구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4)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mb=N>

〈그림 2-1〉 KOSIS '지자체 기본통계'의 지자체별 지표제공 형태 비교

지자체 기본통계 (ex. 부산광역시강서구 기본통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본통계	

출처: KOSIS(<https://kosis.kr/index/index.do>)

2)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 「e-나라지표(정식명칭: 국정모니터링시스템)」는 국가정책수립, 국정운영 점검, 성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표로서, 중앙부처가 각 소관의 담당지표를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시스템 및 서비스를 총괄 운영함

- 「e-나라지표」는 2005년 9월 28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에서 중앙부처 지표를 발굴 및 지표 체계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2006년 9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이후 2007년 3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17호)」을 제정하여 국정운영의 과학화의 기반을 구축 하였음

- 현재(2022. 11. 24. 기준) 4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744개 나라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영역별, 부처별로 지표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 관련 지표는 <표 2-3>과 같음

<표 2-3> e-나라지표 행정안전 및 지방 관련 지표

분류	상세 지표
정부혁신	공공기관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부24 서비스,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부조직 /지자체 /공무원	정부기구 추이,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행정기관 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가입자
전자정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UN전자정부평가
지방재정	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지방재정 규모(세외수입 포함), 지방자치단체 채무지방자치단체, 기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공기업, 재무
지방행정·발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원봉사 참여(성인), 새마을금고, 자전거도로
안전정책	승강기 보유 및 안전사고, 민방위대 편성
재난관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재해 복구, 비자연재해 발생,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
기타	국가기록물 소장, 국가기록물 열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실적

출처: e-나라지표(<https://www.mois.go.kr/frt/sub/a05/statistics/screen.do>)

2.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2017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호)」을 시행하여 행정안전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작성, 보급, 이용하는 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통계지표로 「행정안전통계」가 있으며

지자체 관련 지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내고장알리미」, 「지방재정 36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도 있음

1) 「행정안전통계」(<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상 관리되고 있는 행정안전통계는 통계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통계와 행정안전부 통계책임관이 별도 지정·관리하는 비승인 자체통계를 의미하며, ‘지방행정 및 지역발전’, ‘지방재정’ 및 ‘기타’ 등 지방행정 관련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행정안전통계는 1999년부터 매년 <행정안전통계연보>를 책자 파일로 제공하여 지역 관련 통계정보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4>)
- 기존 <행정안전통계연보>는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 지표 확인을 위해서는 연도별 파일을 일일이 내려받아야 하고 지표를 편리하게 활용하는데 제약이 발생하는 등 낮은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였으나 이후 ‘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음
 - 행정안전통계는 8개 분야 328종의 통계를 그래프, 표 등 시각화 정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166종의 통계에 대해서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그래프 형태로 제공함
 -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로 엑셀 파일형태(xls)를 추가하여 이용자 접근성 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주제와 분야별로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통계 항목이나 기간 등 원하는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이 가능함⁵⁾

5) 통계 시각화 서비스(<https://data.mois.go.kr/mois/visual/statMain.do>)

6) ‘행정·안전 관련 통계 328종 한 눈에... ‘통계 시각화 서비스’ 시행’,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 TR_000000000008&nttlId=84641

〈표 2-4〉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목록

구분	지표구성		내 용
	중분류	세분류	
계	150종	329개	-
정부조직	9종	19개	정부기구, 전체 공무원 정원, 책임운영기관 정원 등
행정관리	20종	45개	민원행정, 정부24,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안, 정책연구 등
디지털정부	11종	19개	UN전자정부평가, 행정정보공동이용, PC영상회의 등
지방행정·발전	34종	75개	인구, 행정구역, 지방의회, 도로명, 자원봉사, 마을기업 등
지방재정	10종	26개	지자체 예산, 기금, 채무, 교부세, 지방세, 지방공기업 등
안전정책	21종	54개	지역안전등급, 안전신문고, 승강기사고, 민방위 등
재난관리	33종	72개	지진, 폭염,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 자연재해 등
기타	6종	12개	국가기록물, 정부청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실적 등
부록	6종	7개	행정안전부 정원, 예산, 위원회, 산하기관, 법령 등

출처: 행정안전통계연보

○ 이 가운데 행정안전통계에서 제공하는 지방행정 관련 지표는 〈표 2-5〉와 같음

〈표 2-5〉 행정안전통계의 지방행정 관련 지표

대분류	소분류	지표
지방행정	행정구역	• 총괄, 지역별 행정구역, 연도별 행정구역, 남북한 비교, 행정구역 평균규모, 인구 규모별 행정구역
	인구	•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연도별 주민등록 인구, 이북5도민,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주민등록세대	• 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연도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연령별 1인세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심의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유형별 의결 결과
	지방의회 의원	• 유형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기수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조례·규칙	• 유형별 조례·규칙 보유, 연도별 조례·규칙 보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 지역별 공무원 정원, 연도별 공무원 정원, 기관·계층별 공무원 정원, 직급별 공무원 정원

대분류	소분류	지표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 직급별 공무원 현원, 연도별 공무원 현원, 연령별 공무원 현원, 여성공무원, 지방공무원 휴직,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지역별 신규임용, 균형인사 임용, 퇴직공무원, 공무원 징계
	지방자치단체 기구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
	주민직접참여제도	• 주민투표 실시사례,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사례, 주민소송 제기사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역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자치회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
	국가기초구역	• 총괄, 지역별 구역번호 할당 및 기초구역설정, 연도별 국가기초구역 설정
	도로명	• 지역별 도로명, 위계별 도로명, 부여사유별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지역발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실적		-
마을기업 육성사업		• 연도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공방 육성사업		-
정보화마을		-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
특수상황지역		-
서해 5도 발전 지원 사업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 자전거도로 현황, 공영자전거 운영 현황
새마을금고		• 지역별 새마을금고 운영, 지역별 새마을금고 회원, 지역별 새마을금고 자산
지역사랑상품권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참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

대분류	소분류	지표
지역발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
	온천	-
	전국 공중화장실	-
	지구촌 새마을 운동	-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예산	• 총괄,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비교, 기능별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수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분석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기금	-
	지방자치단체 채무	•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채무,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채무
	지방교부세	• 연도별 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역별 보통교부세 배정내역
	지방세	• 총괄, 지방세 신장 추세, 지역별·세목별 지방세 규모, 연도별 지방세 징수실적, 조세부담률
	지방세외수입	• 지역별 세외수입징수실적, 항목별 세외수입징수실적
	공유재산 종류	-
	지방공기업	• 지역별·사업별 공기업, 연도별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채무
지방출자·출연기관	-	
기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훈련	• 일반교육, 사이버교육

출처: 행정안전통계

2)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행정 투명성, 책임성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재정 등 지자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알리미(공식명칭: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Local Administration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음
- 내고장알리미의 운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정부업무

- 평가기본법」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근거함
- 내고장알리미에서 제공하는 통계지표는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 및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로서 일반통계에 해당함
- 내고장알리미에서는 조직, 인사,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정보의 요약형 대시보드, 통계지표, 시각화 그래프 등을 1년 주기로 제공하고 있음. 상세 지표는 <표 2-6>과 같음
- 조직운영 관련 지표는 지자체 조직 관련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음. 조사 대상 규모는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반기별 공표함
 - 인사운영 관련 지표는 지방인사제도 수립 및 개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공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생산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와 동일 자료임. 조사 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이며 연간 단위로 지표 공표함
 - 재정운영 관련 지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통합 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통계와 동일 지표임
- 이 외에도 각 지자체별 조직 정보, 행정조직, 재정정보, 업무계획,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등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 그래프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지자체 웹페이지를 연계하여 상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지표 데이터는 EXCEL, CSV, XML, PDF, HWP 형태로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표 2-6> 내고장알리미 제공 주요지표

대분류	소분류	지표
조직운영	-	• 공무원 정원, 과장급 이상 비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재정규모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인사운영	현원	• 공무원 현원, 시간선택제 전환 인원, 임기제 인원, 여성공무원 현황, 직종별 현원, 계급별 현원

대분류	소분류	지표
인사운영	기본현황	• 연령 현황, 장애인공무원, 기술직 이공계 인원, 평균 총 근무연수, 정년퇴직 예정인원
	인사운영	• 여성관리자 현황, 신규임용 인원, 휴직 인원, 퇴직 인원, 승진 인원, 파견 인원, 인사교류 인원, 육아휴직 현황, 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비율, 7-9급 합격자 인원, 평균승진소요연수
	복무·후생복지	• 평균 연가일수, 평균맞춤형복지 현황, 출산휴가 인원
재정운영	-	• 지방재정365 지표

출처: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3)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⁷⁾

- 「지방재정365」는 2016년 개설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 등 1,390개 기관의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재정·경영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재정365」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중 중요한 항목을 ‘동종 자치단체’, 그리고 인구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개하는 ‘지방재정 통합공시’를 제공하고 있음.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은 <표 2-7>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이루어야 함

〈표 2-7〉 지방재정 통합공시 항목

분류	지표	지표설명
예산규모	• 세입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예산 규모
	•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출예산 규모

7)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정 지표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나, 일부 지방분권 관련 지표가 「지방재정365」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플랫폼을 간략하게 소개함

분류	지표	지표설명
예산규모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
재정여건(예산)	• 재정자립도[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재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당초예산기준)
	• 재정자주도[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자체재원(수입)과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당초예산기준)
	• 통합재정수지비율[당초]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당초예산기준)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재정규모 전망
	• 성인지예산 비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된 예산
	• 재정운용상황 개요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결과를 정리한 자료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을 운영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 지방의회 관련경비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지방보조금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 경비
	• 공무원 일·숙직비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 국외여비 편성현황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성된 공무원 국외출장경비
	• 행사·축제경비 편성내역	한 해 동안 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 예산편성 내역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징수율 향상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법령위반 지출 등으로 감사에 적발되어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감액된 금액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재정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

출처: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

- 지방재정의 통합공시 외에도 ‘지방재정통계’, ‘알기쉬운 지방재정’, ‘재정데이터 개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지방재정통계는 통합공시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정보, 계약정보, 공공시설 현황 등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함
 - 재정데이터 개방은 Open API, Sheet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함
 - 알기 쉬운 지방재정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재정정보를 주제별로 시각화를 통해 알기 쉽게 제공

〈표 2-8〉 지방재정365 지표 공개정보 및 공개주기

공개정보	공개내용	공개주기	지표
지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시·도 교육청, 알기쉬운지방재정, 지자체간 비교검색	연간/일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식부기 재무현황,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알기쉬운지방재정	테마별재정, 재정배움터, 재정용어사전	수시	예산현황, 재정여건, 재정건전성, 재정운영효율성
재정데이터개방	데이터 셋(Dataset), 공공데이터 개방	수시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출처: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진, 국민의 알권리 충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등의 목적으로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서비스함
 - 199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책 현황통계 자료를 제공해 오던 지방행정정보은행(LAIB, Loc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Bank)이 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으로 새롭게 서비스되고 있음

※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이 포함됨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은 지자체별, 시도 및 시군구별 자치법규(조례, 규칙, 훈령, 예규) 현황을 표, 그래프 등으로 지표화하여 제공하고 있음⁸⁾
 - 이외에도 각 자치단체의 현행, 폐지 자치법규를 소관 업무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치법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음
 - 다만 엑셀 파일형태(xls)로 다운로드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그림 2-2〉 자치단체별 자치법규 현황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5)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https://www.localdata.go.kr/>)

- 2015년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축적된 인허가 정보로, 건강·문화·생활·식품 등의 인허가 정보를 DB화하여 수요자에 제공하고 있음

8) <https://www.elis.go.kr/sysinfo/alrStatList>

- 건강(병원, 의원, 안경업 등), 동물(동물병원, 동물판매업 등), 문화(공연장, 여행업, 영화상영관 등), 생활(미용업, 세탁업, 대규모점포, 등록체육시설업 등), 식품(식품판매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자원환경(석유판매업, 지하수시공업체 등) 등 195종(2022.11. 기준)의 인허가 데이터를 분류 제공하고 있음
- 데이터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업종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인허가 시점부터 최근 시점까지의 기준일 자료들을 XML, EXCEL, CSV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음<그림 2-3>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데이터 다운로드 외에 OPEN API로도 제공됨

〈그림 2-3〉 게임물배급업 인허가 데이터

번호	게임서비스명	게임서비스아이디	게임사지정세코드	관리번호	인허가일자	허가취소일	업종상태구분	영업상태명	상세영업상태코드	상세영업상태명
1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90404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2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00210	03	폐업	03	폐업	
3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10408	04	취소/말소/만료/정지/중지	35	직권말소	
4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80901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5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80825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6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81215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7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40424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8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19990701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9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20925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0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71019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1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71127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2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201112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3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81112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4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90611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5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90918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6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210531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7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60612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8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60106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19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160105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20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90318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21	게임물배급업	03_05_01_P	3000000	CDFF2241	20090618	01	영업/정상	13	영업중	

출처: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https://www.localdata.go.kr/>)

3. 교육부

- 교육부는 1962년 전국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본통계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1998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전담하고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통계 데이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였

음. 이후 2017년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었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1)

- 현재 교육부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통계지표 제공 사이트로 ‘교육통계서비스’,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등이 있음

1)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교육통계서비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통계센터에서 제공·관리하는 서비스로 대국민의 교육통계 수요에 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요구되는 방대한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분석·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통계서비스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시행 2018. 6. 8.)」에 근거함
-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지표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에 해당하며 크게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국제통계 등으로 범주화하여 제공하고 있음
- 교육통계 지표는 주제별, 설립별, 행정구역별, 지역규모별, 과정별, 학제별, 연도별 등 다양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음
 - 예컨대 2022년 기준 유초중등통계의 지표는 행정구역별(시군구 단위), 지역규모별(특별/광역시, 시, 읍지역, 면지역, 특수지역)로 유초중등 개황, 학년별 학급 수 학생 수, 연령별 학생 수, 직위별 교원 수,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학생변동상황, 학업중단률 및 중단 사유, 다문화(유형별) 학생 수, 유학생(유형별) 학생 수, 시설 현황 등의 통계표를 제공하고 있음
- 교육통계의 지표 생산은 일반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며 PDF, WORD, EXCEL 등의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나아가 제공 통계표를 모두 영어로 변환하여 확인이 가능함

〈표 2-9〉 교육통계서비스의 주요 지표

분류	지표
유초중등통계	• 연도별학급당학생수(1999-2022)
	• 연도별교원1인당학생수(1999-2022)
	• 연도별학생만명당유학생수(2001-2021학년도)
	• 연도별유학국가별유학생수(2001-2021학년도)
	• 연도별취학률(2000-2022)
	• 연도별다문화학생수(2012-2022)
	• 연도별부모국적별다문화학생수(2012-2022)
	• 연도별학업중단률(1999-2021학년도)
대학통계	• 연도별신입생총원율(1999-2022)
	• 연도별재학생총원율(2010-2022)
	• 연도별학업중단률(1999-2021학년도)
	• 연도별대학원(석·박사)학위취득자수(1999-2022)
	• 연도별고등교육기관외국인전임교원비율(1999-2022)
	• 연도별대학교원의국내/국외박사학위자수(1999-2022)
	• 연도별국내외국인유학생현황(1999-2022)
	• 연도별학생만명당외국인유학생수(1999-2022)
	• 연도별전임교원1인당재학생수(1999-2022)
	• 연도별전임교원확보율(2010-2022)
	• 학제별설립별성별취업률및진학률(2020년)
취업통계	• 학제별시도별취업률및진학률(2020년)
	• 연도별취업률및진학률(2016-2020년)
	• 학제별계열별취업률및진학률(2020년)
	• 학제별 유지취업률(2020년)
	• (개인실태조사)평생학습참여율(2020)
평생통계	• 기관유형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사배치현황(2021)
	• (개인실태조사)비형식교육참여율(2020)
	• 기관유형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상위프로그램수(2021)
	• 기관유형별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별사무직원수(2021)
	• 연도별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현황(2000-2020)
	• 지역별기관유형별비형식평생교육기관수(2021)

분류	지표
국제통계	• 국가별IMD교육경쟁력순위(2015-2021)
	• OECD학급당학생수(2019)
	• OECD연령별취학률(2019)
	• 한국의WEF국가경쟁력교육관련지수별순위(2018-2019)
	• OECD학생1인당공교육비(2018)
	• OECD교사1인당학생수(2019)
	• GDP대비공교육비비율(2018)
	• 한국의IMD교육경쟁력세부지표순위및점수(2016-2021)

출처: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index>)

2)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 및 비교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 시스템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⁹⁾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지방재정법」 제55조에 근거, 매년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이후 재정 운용 분석결과를 지방의회,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에 기여(한국교육개발원, 2021)¹⁰⁾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개별 공시 자료를 통합 제공하며 최근 5개년도의 공시 자료를 시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또 2004년부터 지방교육 재정 추이를 확인 가능함
-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효율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재정운용상황을 적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지표인 분석지표와 참고지표로 구분하여 제공

9)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소개글(<https://eduinfo.go.kr/portal/bbs/eduinfoPage.do>)

10) 한국교육개발원(202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분석지표는 사전예고 과정을 거쳐 시계열 데이터 관리, 재정운용상황의 핵심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인 반면 참고지표는 시계열 자료 축적·관리가 필요하거나 재정분석의 목적을 상당 수준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일컬음
-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표는 분석의 목적과 정보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의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정책목적상 시의성이 높은 지표들을 ‘재정 책무성’ 지표로 구성
 - 재정 건전성의 경우 현재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수지 및 채무 관리 등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구성
 - 재정 효율성은 재원 조달 및 지출 효과 관점에서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효율 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
 - 재정 책무성의 경우 민주적 절차·공개행정·사회적 약자 지원 등 재정 관련 또는 정책적 평가와 관련 있는 부가적인 성격의 지표에 해당
- 맞춤형 검색으로 통계표를 자유롭게 비교 분석 가능하며 EXCEL, HWP, XML, JSON, CSV, TXT, RDF, JPG(시각화 그래프) 등 원하는 형태의 지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표 2-10〉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주요 지표

분류	소분류	지표명	
재정 건전성 (3개)	-	• 통합재정수지 비율	
		• 경상적 지출 비율	
		• 관리채무 비율	• 총 관리채무 비율, 자체부담 관리채무 비율
재정 효율성 (10개)	확보 및 운용 (5개)	• 학교용지매입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전입 비율('09년~해당년도)	
		• 체납액 비율 및 증감률	• 체납액 비율, 체납액 비율 증감률
		•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사립학교 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집행 비율

분류	소분류	지표명	
재정 효율성 (10개)	확보 및 운용 (5개)	• 본예산 편성 비율	•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시설비 본예산 편성 비율, 인건비 본예산 편성 비율(예비)
		•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 비율 및 증감률	•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증감률
	적정집행 (5개)	• 예산집행 비율 및 • 증감률	• 예산집행 비율, 예산집행 비율 증감률, 시설비 집행 비율, 시설비 집행 비율 증감률
		• 이·불용액 비율	•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 학교회계 이월액 비율, 학교회계 불용액 비율
		• 1~2분기 예산 집행 비율('21회계연도)	• 예산 조기집행 비율, 소비투자 분야 조기집행 비율
		• 개교 3~5년 학교 대비 적정 학생수용 학교수 비율	
		•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수 비율	
재정 책무성 (3개)	-	•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 실적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구매 비율	

출처: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 관련 현황 등 다양한 선거 관련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1>
 -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의원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교육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매 선거의 선거 관련 지표를 서비스함
 - 예컨대 '개표단위별 개표결과'의 경우 각 선거의 선거인 수, 투표수, 후보자별 득표 수, 무효투표 수, 기권 수 등의 지표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제공하고 있음
-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PDF, EXCEL 형태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형태는 온라인에 조회된 내용과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HTML5 기반으로 멀티브라우저에서 활용 가능함

〈표 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지표체계도

대분류	지표
기본현황	• 선거일정, 위원회주소, 선거구수 및 정수현황, 선거구 및 읍면동현황,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사전투표소 현황, 선거일투표소 현황, 개표소 현황
후보자	• 후보자 등록수, 후보자 명부,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명부, 사퇴/사망/등록무효, 후보자 통계
선거비용	• 선거비용공개
투·개표	• 투표진행상황, 개표진행상황, 개표단위별 개표결과
당선인	• 당선인 명부, 무투표당선인 명부, 당선인 통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https://mpccak.or.kr/>)

- 1991년 출범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시도의회의원 현황, 시도의회 예산편성 현황, 시도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현황,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현황, 시도의회 조례안 발의 현황(반기별) 등을 2019년부터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제공 지표 데이터가 PDF 형태로 한정되어 지표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도가 제한적임

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s://www.opengirok.or.kr/>)

- 2008년 출범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알권리와 관련한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실태조사, 연구, 언론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센터는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2021)’, ‘서울시 25개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내역 공개(2019)’,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내역 공개(2019)', '2014년~2019년 기초의회 의원 징계내역 공개(2019)', '20대 국회의원 2019년 재산공개(2019)', '공직사회 성매매 관련 징계현황과 문제점 분석(2019)', '알권리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2018)',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정연수내역 분석(2018)' 등 지자체 차원의 투명한 정보제공이 제한적인 민감한 영역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예컨대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¹¹⁾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2년 5개월 간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서 의결한 의원 징계 내역을 소속 정당별, 징계 유형별, 징계수위별로 정리하고 나아가 징계 많은 기초의회 순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 사례 등을 엑셀(EXCEL) 파일 형태로 제공하였음(〈그림 2-4〉)

〈그림 2-4〉 기초의회 징계 통계표

기초의회별 징계 의결 건수		징계 사유가 된 사건 유형 분류	
의회 이름	징계 의결 건수	사건 유형	징계 의결 건수
대전 중구의회	13	욕설, 막말, 폭행 등	12
전남 강진군의회	6	이권 개입	10
광주 북구의회	6	의원직 수행 불성실 (의회 보이콧, 무단이탈)	8
경북 구미시의회	4	겸직 금지 위반	8
서울 관악구의회	3	해의연수/국내출장 관련	7
경북 예천군의회	3	의회 권위 실추 (SNS 규탄성명 등)	5
경기 고양시의회	3	음주운전	5
기타 (29개 의회)	38	공무원 상대 갑질	5
		성추행	4
		징계 불이행	2
		업무추진비 남용	2
		기타	7

출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https://www.opengirok.or.kr/>)

11)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JMd1wa-rNPqvEVnD8j424eQXOUWwMw8LY7MxMHO2P4/edit?usp=sharing>)

- 이상 지방행정 통계 서비스 플랫폼을 정리하면 <표 2-12>와 같음
- 대표 제공기관은 통계청,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대한민국시도의회장 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존재함
 - 이외에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인사혁신통계,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농사로 등 다수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및 통계 플랫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① 시도·시군구의 특정이 불가하거나 ② EXCEL, CSV가 아닌 PDF, HWP 파일 형태만을 제공하거나 ③ 사례별 현황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 접근성이 전체적으로 높다고 보기 힘들

〈표 2-12〉 지방행정 통계 서비스 플랫폼 종합

제공 기관	통계서비스	지표 영역	데이터 접근성	비고
통계청	e-지방지표	인구, 건강, 주거와 교통, 소득과 소비, 고용과 노동, 교육,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통합, 성장과 안정, 환경, 일자리 상황, 삶의 질, 저출산/고령화 등	EXCEL, CSV, TXT, 시각화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정부혁신, 정부조직, 지자체, 공무원, 지방재정, 지방행정 및 발전,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EXCEL, 시각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17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	지방재정, 지역발전, 지방재정 등	EXCEL, 시각화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내고장알리미	조직운영, 인사운영, 재정운영	EXCEL, CSV, XML, PDF, HWP, 시각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지방재정법」

제공 기관	통계서비스	지표 영역	데이터 접근성	비고
				제60조(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 「정부업무평가기 본법」 제26조(평가결과 의 공개)
	지방재정365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	EXCEL, CSV, TXT, 시각화	「지방재정법」 제60조
	자치법규정보 시스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현황	EXCEL, 시각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입법 등에 관한 지침」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건강, 동물, 문화, 생활, 식품, 자원환경 등에 대한 인허가 데이터	EXCEL, CSV, XML, 시각화	공공데이터법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행정구역별, 지역규모별 교육 통계 제공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평생통계, 국제통계)	PDF, WORD, EXCEL, 시각화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책무성	EXCEL, HWP, XML, JSON, CSV, TXT, RDF, JPG	「지방재정법」 제6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투·개표, 당선인 관련 현황	PDF, EXCEL	-
	대한민국시도의회장 협의회	시도의회의원 현황, 시도의회 예산편성현황, 시도의회 사무기구 및 직원 현황,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PDF 위주	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의원징계내역 등	구글드라이브(worksheet) 사용	시민단체
기타	정보공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처리 현황, 리기간, 원문공개율 등	PDF	-
	서울정보소통광장	지자체단체장 업무추진비 등	EXCEL	-

제공 기관	통계서비스	지표 영역	데이터 접근성	비고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대상 정기 인사혁신통계 제공	EXCEL, HWP	국가공무원법 제18조,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수, 지역별 의료인력, 지역별 입원실 현황 등	EXCEL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
	농사로	비료/농약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	웹사이트 only	농촌진흥청 운영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등	EXCEL	농촌진흥청 운영

출처: 연구진 작성

제4절 통계 지표 현황

1. 지방행정 관련 통계 지표의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분류 체계

-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 지방행정 관련 통계 지표의 축적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차별화된 접근으로 지방분권 및 자치를 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지방분권 및 자치의 방향은 크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세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자치입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자주적으로 정립하는 권리로, 헌법 제117조 1항에 근거함
 - 자치조직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보수·사무 분장 등을 조례 또는 규칙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리로, 집행기관에 대한 사항에 관련되어 있음
 - 자치행정권이란 자기 사무를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과 사회·경제질서의 유지, 생활환경의 정화 등을 위해서 권력작용 및 관리적 작용을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법안으로, 총 12장, 제211조로 이루어져 있음
 -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는 법안으로, 총 12장, 제83조로 이루어져 있음
 - 세 가지 자치권과 두 가지 법안을 조합하여 도출한 지표분류체계에 따른 지표 수는 다음과 같음

〈표 2-13〉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의 현황 파악 분류 체계

자치권 분류	대분류	소분류	지표 수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25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경계변경	2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자율협의체	0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4
자치입법권	주민	주민투표	5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11
	주민	규칙의 개정과 제정, 폐지 의견 제출	3
	주민	감사 청구	1
	주민	주민소송	2
	주민	주민소환	1
	주민	정보공개	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1
	조례와 규칙	조례 위반	1
	선거	선거 결과	9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8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2
	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회	0
	지방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1
	지방의회	지방의원 체포(부패)	1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1
	지방의회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1
	지방의회	소집과 회기	3
	지방의회	의장	3
	지방의회	부의장	2
	지방의회	위원회	4
	지방의회	회의	8
	지방의회	청원	1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0
	지방의회	질서	0
	지방의회	징계	6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6

자치권 분류	대분류	소분류	지표 수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1
	집행기관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2
	집행기관	자치경찰기관	5
	집행기관	소방기관	29
	집행기관	교육훈련기관	17
	집행기관	보건진료기관	18
	집행기관	시험연구기관	2
	집행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	6
	집행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8
	집행기관	사업소	3
	집행기관	출장소	8
	집행기관	합의제행정기관	0
	집행기관	자문기관	0
	집행기관	읍,면,동장	0
	집행기관	읍,면,동사무소	3
	집행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9
	집행기관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0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협의회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조합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0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사무 위탁	0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0
주민참여		주민참여 행정	0
자치조직권	인사관리	정원/현원/조직	93
	인사관리	임용	3
	인사관리	의원면직	1
	인사관리	승진	3
	인사관리	파견	1
	인사관리	수당	5
	인사관리	부패	3
합계			359

※ 대분류와 소분류는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을 참조함

출처: 연구진 작성

2. 지표 분류별·통계 플랫폼별 지표 수

○ 각 지표분류별 지표 수

-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는 100개, 자치조직권 관련 지표는 220개,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는 39개로, 전체 359개의 지표가 수합되었음
- 자치입법권 중 주민 관련 지표는 32개, 조례와 규칙 관련 지표는 2개, 선거 관련 지표는 9개, 지방의회 관련 지표는 57개로 나타남
- 자치조직권 중 집행기관 관련 지표는 111개, 인사관리 관련 지표는 109개로 나타남
- 자치행정권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지표는 27개,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관련한 지표는 4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관련 지표는 8개로 나타남

〈표 2-14〉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각 카테고리별 지표 수

자치권	대분류	지표 수
자치입법권	주민	32 (32.0%)
	조례와 규칙	2 (2.0%)
	선거	9 (9.0%)
	지방의회	57 (57.0%)
	소계	100 (100.0%)
자치조직권	집행기관	111 (50.5%)
	인사관리	109 (49.5%)
	소계	220 (100%)

자치권	대분류	지표 수
자치행정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27 (69.2%)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4 (10.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8 (20.5%)
	소계	39 (100%)
지표 총 합계		359

출처: 연구진 작성

○ 통계 플랫폼 별 지표 수

- 통계 플랫폼 별로는 통계청(108개)이 가장 많았고, 행정안전부(88개), 내 고장알리미(31개)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2-15〉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 플랫폼별 지표 수

통계 플랫폼	지표 수
경찰청	1
공공데이터포털	2
교육통계서비스	5
국민권익위원회	1
내고장알리미	31
농약안전정보시스템	1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4
보건복지부	2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3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1
서울정보소통광장	3
서울특별시	2

통계 플랫폼	지표 수
서울특별시의회	1
소방청	14
의안정보	2
인사혁신처	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5
정보공개	9
중소벤처2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지방재정365	4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16
통계청	10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6
행정안전부	88
e-지방지표	17
e-나라지표	4
합계	359

출처: 연구진 작성

3. 자료 유형별·지표 범위별·통계유형별 지표 수

○ 통계지표 자료 제공 유형

- 통계지표 자료 제공 유형은 ①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②HWP 형태의 자료 제공(PDF 형태의 파일 함께 제공 포함) ③PDF 단독 제공 ④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으로 구분되었음
- 자치입법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률이 53.0%로 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편이었음. 또한 PDF 단독 제공 혹은 웹사이트상에서 단독 제공하는 비중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었음

〈표 2-16〉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자료 제공 유형(카테고리별)

자료 제공 유형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합계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53 (53.0%)	174 (79.1%)	33 (84.6%)	260 (72.4%)
HWP 형태의 자료 제공(PDF 형태의 파일 함께 제공 포함)	15 (15.0%)	16 (7.3%)	2 (5.1%)	33 (9.2%)
PDF 단독 제공	27 (27.0%)	22 (10.0%)	4 (10.3%)	53 (14.8%)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	5 (5.0%)	8 (3.6%)	0 (0.0%)	13 (3.6%)
합계	100 (100.0%)	220 (100.0%)	39 (100.0%)	359 (100.0%)

출처: 연구진 작성

- 통계청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률이 89.8%로 높았으나, 행정안전부는 72.7%, 기타 플랫폼의 경우 60.7%로 낮은 편이었음
- 특히 PDF 단독제공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20.5%로 기타 플랫폼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기타 플랫폼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단독 제공 유형도 8.0%로 나타나 자료 접근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었음

〈표 2-17〉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자료 제공 유형(통계 플랫폼별)

자료 제공 유형	행정안전부	통계청	기타	합계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	64 (72.7%)	97 (89.8%)	99 (60.7%)	263 (73.3%)
HWP 형태의 자료 제공(PDF 형태의 파일 함께 제공 포함)	6 (6.8%)	10 (9.3%)	17 (10.4%)	39 (10.9%)
PDF 단독 제공	18 (20.5%)	1 (0.9%)	34 (20.9%)	55 (15.3%)

자료 제공 유형	행정안전부	통계청	기타	합계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	0 (0.0%)	0 (0.9%)	13 (8.0%)	13 (3.6%)
합계	88 (100%)	108 (100%)	163 (100%)	359 (100%)

출처: 연구진 작성

○ 통계지표 제공 범위

- 통계지표 제공 범위는 ①시도 ②시군구 ③읍면동 ④통리반 ⑤국가, 지방총괄 ⑥시도, 시군구 특정불가능 ⑦읍면동 특정불가능 ⑧특정 시도 ⑨특정 시군구 ⑩특정 읍면동으로 구분함
 - ‘특정불가능’이란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행정구역 유형별 통계는 산출되어있으나 특정 시도·시군구·읍면동의 통계는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예: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신규임용 공무원 수와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신규임용 공무원 수는 알 수 있으나, 개별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신규임용 공무원 수는 알 수 없는 경우)
 - ‘특정’이란 일부 시도·시군구·읍면동에 한하여 통계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예: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토지지목별 현황은 특정 시군구만 자료 존재)
 - ‘국가 및 지방총괄’이란 국가 기능에 대응하는 지방 총괄 통계만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함 (예: 국가공무원 정원과 지방공무원 정원만 나와 있는 경우)
- 전체에서 ① 시도 유형이 160개 지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4.6%), 시군구가 특정되는 비중은 ②, ③, ④ 유형을 합쳤을 때 90개 지표(25.1%)로 시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이 특정되는 유형은 19개 지표(5.3%)로 낮은 수준이었음
- 지표 수집 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가공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어 공개되는 유형인 ⑤, ⑥, ⑦ 유형은 전체적으로 지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지표 중 11.9%를 차지함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지표의 비중 역시 약 18.4%를 차지하고 있어 타 지자체가 생산하고 있는 지표에 대한 벤치마킹 가능성이 존재함

〈표 2-18〉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통계지표 제공 범위(카테고리별)

분류	제공범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원	자치행정권	합계
현재 생산되고 있는 지표	① 시도	45 (45.0%)	100 (45.5%)	15 (38.5%)	160 (44.6%)
	② 시군구 ("시도, 시군구" 포함)	36 (36.0%)	29 (13.2%)	5 (12.8%)	70 (19.5%)
	③ 읍면동 ("시도, 읍면동", "시군구, 읍면동" 포함)	0 (0.0%)	12 (5.5%)	7 (17.9%)	19 (5.3%)
	④ 통리반	0 (0.0%)	0 (0.0%)	1 (2.6%)	1 (0.3%)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 특정 불가능 (지표 비효율성 초래)	⑤ 국가, 지방총괄	0 (0.0%)	4 (1.8%)	3 (7.7%)	7 (1.9%)
	⑥ 시도, 시군구 특정불가능	1 (1.0%)	34 (15.5%)	0 (0.0%)	35 (9.7%)
	⑦ 읍면동 특정불가능	0 (0.0%)	1 (0.5%)	0 (0.0%)	1 (0.3%)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생산되는 지표	⑧ 특정 시도	4 (4.0%)	17 (7.7%)	3 (7.7%)	24 (6.7%)
	⑨ 특정 시군구	14 (14.0%)	21 (9.5%)	5 (12.8%)	40 (11.1%)
	⑩ 특정 읍면동	0 (0.0%)	2 (0.9%)	0 (0.0%)	2 (0.6%)
합계		100 (100%)	220 (100%)	39 (100%)	359 (100%)

출처: 연구진 작성

○ 통계유형별 지표 수

- 통계 유형별 지표는 승인통계와 비(非)승인통계,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구분함
- 승인통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로 신뢰성이 높음. 승인통계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뉘짐

- 지정통계(「통계법」 제3조 제2호, 「통계법」 제17조)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통계작성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통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를 지칭함
 -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통계청장이 인정하는 통계
- 일반통계는 승인통계 중 지정통계를 제외한 모든 통계를 의미함
- 현황 분석 결과, 승인통계는 총 359개 지표 중 158개(44.0%)로, 그 중 일반통계가 136개(37.9%), 지정통계가 22개(6.1%)였음
- 승인통계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자치입법권(14개, 14.0%)이었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조직권(134개, 60.9%)였음

〈표 2-19〉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 현황: 승인통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현황

분류	승인통계		비승인통계	확인되지 않음	합계
	일반통계	지정통계			
자치입법권	14 (14.0%)	0 (0.0%)	86 (86.0%)	0 (0.0%)	100
자치조직권	112 (50.9%)	22 (10.0%)	70 (31.8%)	16 (7.2%)	220
자치행정권	10 (25.6%)	0 (0.0%)	29 (74.4%)	0 (0.0%)	39
합계	136 (37.9%)	22 (6.1%)	185 (51.5%)	16 (4.5%)	359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절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 설정

1. 통계 플랫폼에 대한 평가

□ 지방행정 통계 관련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조사

- 통계청의 ‘e-지방지표’, ‘e-나라지표’에서 흡수하지 못하는 다양한 지방행정 통계 관련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며 관련 플랫폼이 통일성 없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함
-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pdf 등 가공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음
- 다양한 통계 플랫폼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허브플랫폼의 역할을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운영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 통계플랫폼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현재 플랫폼 이용 지형을 기초적으로 평가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통계 플랫폼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

2.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한 현존 통계 지표의 평가

□ 현재 통계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는 복수의 직관적 분류체계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가치를 함양하는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e-지방지표’, ‘행정안전통계’, ‘내고장 알리미’ 등 통계플랫폼들은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복수의 직관적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음
- 통계지표가 활용되는 정책 영역과 해당 지표를 생산하여 궁극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정책 가치를 함께 담은 분류 체계를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
- 이에 연구진은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 등 지방자치 및 분권의

가치를 담은 분류체계로 구분한 현존 지방행정 지표들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제시하고자 함

□ **민간인·일반 국민을 위한 통계 대중화의 경향성 확인되므로, 기존 지표의 접근성과 지표활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필요**

- 다수 통계 플랫폼에서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접근성이 올라가는 듯 보이나, 정보 공개의 방향이 원천 자료(raw data)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이터 투명성의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누락·소실 되는 통계 지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표 제공 형태 및 지표 제공 범위의 수정과 승인·지정통계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제시**

- 통계지표 자료 제공 유형에서 가공이 어려운 형태인 PDF 단독 제공,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 유형이 전체 359개 지표 중 68개 지표(18.9%)를 차지하고 있었음
- 특히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의 경우,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률(53.0%)이 다른 유형의 자치권 지표(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통계플랫폼 별로 살펴보았을 때, 통계청은 약 90% 정도 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통계지표를 업로드하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72.7% 밖에 되지 않았음. 또한 PDF 단독 제공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20.5%)와 기타 플랫폼(20.9%)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지표 제공 범위 역시 지표 수집 과정에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특정하지 않고 행정구역 유형별로 공개하는 지표들이 상당수 나타났으며, 이는 지자체 서열화에 따른 지표 생산의 부담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통계 지표 제공 범위가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 치중되어 있음.

시도 유형이 160개 지표(4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가 특정되는 비중은 90개 지표(25.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읍면동을 특정할 수 있는 지표 역시 19개 지표(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3.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의 실시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의 불균형이 확인되므로, 자치조직권 중에서도 인사관리의 경우 기존 플랫폼을 기준으로 통계 제공 유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가장 지표수가 적은 자치행정권 분야의 경우 연구진이 적극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안)을 제시함**
 - 자치입법권에 관련된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등을 다루는 통계지표(100개)와 자치행정권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통계지표의 숫자(39개)가 자치조직권 관련 지표(220개)보다 적었음
 - 특히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협의체, 행정사무 위탁, 특별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 행정 등의 지표가 부족하였음
 - 다만 자치조직권 중에서도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회, 의원의 사직·겸직·자격심사, 질서,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 읍·면·동장,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관련 지표가 부족하였음
- **일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통계 지표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확인되므로,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표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표(안)을 구성함**
 - 서울시와 같은 자체 플랫폼을 통하지 않더라도, 'e-지방지표' 플랫폼 상에서 비록 pdf 상이긴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행정 상황을 알려주는 통계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몇몇 지자체의 경향성을 확인함

제 3 장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 수요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기존 통계지표 평가 조사

제3절 새로운 통계지표 수요 조사

제4절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제3장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통계 수요조사 및 지표체계 제안

제1절 분석의 개요

□ 기존 지표 및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

- 202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총 30명의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에게 기존 지표 및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대상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구성은 <표 3-1>과 같음

〈표 3-1〉 전문가 자문 집단의 구성

특성		응답자수(%)
성별	남	17(56.7%)
	여	12(40.0%)
	무응답	1(3.3%)
나이	30대	9(30.0%)
	40대	18(60.0%)
	50대	3(10.0%)
소속	대학(교수, 대학소속 연구원 등)	13(43.3%)
	연구기관(국책/지자체 연구원, 민간 컨설팅기관 등)	15(50.0%)
	지방정부·의회 등 지방행정관련기관(지방공무원 등)	2(6.7%)
근무경력	평균 7.06년	
관련 전문분야 응답(복수응답)	자치입법권(9명), 자치조직권(인사관리)(11명), 자치조직권(집행기관)(7명), 자치행정권(8명)	
합계	30명	

출처: 연구진 작성

□ 기존 통계지표에 대한 평가 조사

- 2장에서 확인한 기존 통계 플랫폼과 네 가지 분야별 기존 지표에 대한 신뢰성(정확성), 접근성(자료 구득가능성), 지표 활용도에 대하여 조사함
 - 2장의 <표 2-12> 지방지표 통계서비스 플랫폼 종합 정리를 제시하고 각 통계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자료 구득 가능성), 지표 활용도에 대한 1~3순위를 매기도록 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한 의견 수렴함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자치행정권으로 구분하여 기존 지표에 대한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를 ‘매우 낮음(1점)~매우 높음(5점)’의 리커트 척도로 점수 매기도록 함
 - 지표 총 개수가 359개에 달하여 1명의 전문가가 현실적으로 모든 지표의 3개 항목에 대한 점수화가 어려운 관계로, 소분류에 대응하는 지표 묶음에 대한 점수화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는 가장 자신있는 분야를 선택하여(복수 선택 가능) 설문을 진행함
 - 예를 들면, 자치입법권을 선택한 전문가는 ‘주민’ 대분류에서 ‘주민투표’ 소분류에 대응하는 ‘주민소환투표 관련 정보’, ‘주민투표 현황’, ‘주민투표 실시사례’,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사례’ 등 4가지 지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에 대한 점수를 매기게 됨

<표 3-2> 기존 지표 평가 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분류	기존 지표		설문문항				
			매우 낮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관련 정보 주민투표현황 주민투표 실시사례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사례	I-1-1-가. 신뢰성(정확성)	매우 낮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I-1-1-나. 접근성(구득가능성)	매우 낮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I-1-1-다. 지표 활용도	매우 낮음 ①	낮음 ②	보통 ③	높음 ④	매우 높음 ⑤

출처: 연구진 작성

□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

- 본 연구진이 기존 지표를 참고하여 현존하지 않는 지표 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도출한 신규 제안 지표(안)에 대한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함
 - 기존 지표에 대한 평가와 달리,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는 분야를 망라하여 조사함. 즉, 자문을 실시한 전문가 모두가 자치입법권의 대분류 '주민'에 대하여 연구진이 제안하는 신규지표(안)을 평가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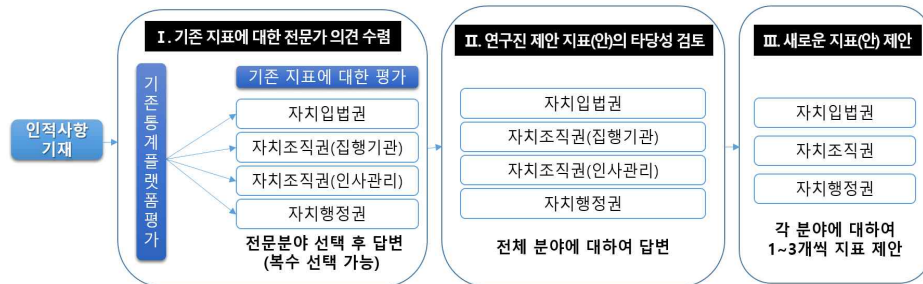
〈표 3-3〉 새로운 지표 수요 조사 설문지의 구성 예시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 하기 각 체크박스의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주민	주민 감사 청구 건수	II-1-1-가. 필요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II-1-1-나. 측정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II-1-1-다. 활용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II-1-1-가. 필요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II-1-1-나. 측정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II-1-1-다. 활용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 없음 <input type="checkbox"/>

출처: 연구진 작성

- 새로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각 분야별로 1인당 1~3개씩 제안받음
- 이상의 전문가 자문 과정을 도식화 하면 〈그림 3-1〉과 같음

〈그림 3-1〉 기존 지표 및 새로운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과정



출처: 연구진 작성

□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제시

- 이상의 기존 통계지표에 대한 평가 조사와 새로운 통계지표에 대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분야에서 새로운 통계지표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체계화 및 서비스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함

제2절 기존 통계지표 평가 조사

1. 통계플랫폼에 대한 평가

- 수집된 359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도출한 주요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 e-나라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지방재정365, 행정안전통계, 내고장알리미 등이었음
- 이에 대해 전문가 30인에게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가 가장 높은 통계플랫폼부터 1~3순위를 매기도록 함
-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¹²⁾를 받은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플랫폼인 ‘e-지방지표’와 ‘e-나라지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통계플랫폼인 ‘지방재정365’가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음
- 반면 대부분의 자료가 웹사이트 상으로 제공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통계’ 등은 하위권을 기록하였음

□ 신뢰성

- 가장 많은 전문가가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통계플랫폼은 ‘지방재정365’였음
-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으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e-지방지표’(59점), ‘e-나라지표’(39점), ‘자치법규정보시스템’(28점) 순이었음

12)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값

〈표 3-4〉 통계플랫폼의 신뢰성 평가 순위

통계플랫폼	신뢰성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e-지방지표	12 (40.0%)	10 (33.3%)	3 (10.0%)	59
e-나라지표	9 (30.0%)	4 (13.3%)	4 (13.3%)	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2 (6.7%)	1 (3.3%)	3 (10.0%)	11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10.0%)	7 (23.3%)	5 (16.7%)	28
지방재정365	1 (3.3%)	5 (16.7%)	11 (36.7%)	24
행정안전통계	1 (3.3%)	1 (3.3%)	1 (3.3%)	6
내고장알리미	0 (0%)	1 (3.3%)	1 (3.3%)	3
기타	2 (6.7%)	1 (3.3%)	2 (6.7%)	-
합계	30(100%)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접근성(구독가능성)

- 가장 많은 전문가가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통계플랫폼은 ‘지방재정365’였음
-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으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e-지방지표’(53점), ‘e-나라지표’(43점), ‘지방재정365’(34점) 순이었음

〈표 3-5〉 통계플랫폼의 접근성 평가 순위

통계플랫폼	접근성(구독가능성)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e-지방지표	11 (36.7%)	8 (26.7%)	4 (13.3%)	53
e-나라지표	9 (30.0%)	6 (20.0%)	4 (13.3%)	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0 (0%)	0 (0%)	3 (10.0%)	3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10.0%)	4 (13.3%)	2 (6.7%)	19
지방재정365	3 (10.0%)	8 (26.7%)	9 (30.0%)	34
행정안전통계	0	1 (3.3%)	6 (20.0%)	8
내고장알리미	1 (3.3%)	0 (0%)	0 (0%)	3
기타	3 (10.0%)	3 (10.0%)	2 (6.7%)	-
합계	30(100%)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지표활용도

- 가장 많은 전문가가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통계플랫폼은 ‘지방재정365’였음
-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으로 부여한 점수로는 ‘e-지방지표’(55점), ‘지방재정365’(38점), ‘e-나라지표’(33점) 순이었음

〈표 3-6〉 통계플랫폼의 지표활용도 평가 순위

통계플랫폼	지표 활용도			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e-지방지표	11 (36.7%)	10 (33.3%)	2 (6.7%)	55
e-나라지표	6 (20.0%)	6 (20.0%)	3 (10.0%)	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	0 (0%)	0 (0%)	4 (13.3%)	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3 (10.0%)	2 (6.7%)	1 (3.3%)	14
지방재정365	6 (20.0%)	5 (16.7%)	10 (33.3%)	38
행정안전통계	1 (3.3%)	2 (6.7%)	3 (10.0%)	10
내고장알리미	0 (0%)	3 (10.0%)	2 (6.7%)	8
기타	3 (10.0%)	2 (6.7%)	5 (16.7%)	-
합계	30(100%)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기타의견

○ 신뢰성

- 신뢰성이 높은 지표는 승인통계, 지정통계이지만 시의성과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정보원이 단일하여 교차검증이 어렵거나, 교차검증을 하더라도 준거가 되는 정보원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아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용 경험에 의한 주관적 인상으로 응답하였다는 견해가 존재함
- 생산주체의 관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신뢰한다는 견해가 존재함

○ 접근성

- 전문가들은 접근성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적었음
- 자세한 지표가 필요할 때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존재함
- ICT 기술의 발달로 필요하면 찾게 되어있는 지표들이 대다수이므로 접근성을 제약요인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함
- 각 지자체별로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나 기관을 설치하여 민간에서 정부 정보를 접근할 때 갖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 경우 지자체별 종합사회조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 의회 사무기구 직원 현황 등 자치입법권 관련 통계에 대한 업데이트가 늦은 편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 지표활용도

- 지표활용도의 경우 연구 분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었음
-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시군단위까지 가공가능한 수준의 자료가 제한적이며, 원하는 형태로의 자료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견해 존재함

2. 기존 통계지표에 대한 평가

1) 자치입법권

□ 지표 구성

- 자치입법권 관련 주요 통계지표는 대분류로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지방의회로 나누었음
 - 주민의 소분류로는 주민투표, 조례 제정·개정·폐지청구, 규칙의 개정·제

정·폐지 의견 제출, 주민소송, 주민소환, 정보공개, 조례 규칙 심의회, 조례 위반 등이 존재함

- 조례와 규칙의 소분류로는 조례 규칙 심의회, 조례 위반이 존재함
- 지방의회의 소분류로는 선거결과, 지방의회의원 임기,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지방의원 체포(부패),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의장, 부의장, 위원회, 회의, 청원, 징계, 사무기구와 직원이 존재함

〈표 3-7〉 자치입법권 관련 기존 통계지표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주민	주민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환투표 관련 정보 • 주민투표현황 • 주민투표 실시사례 •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사례
주민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현행전체건수 • 조례 제정 및 개·폐현황 • 조례 재의요구 현황 •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 • 조례 재의·제소 상세 내역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현황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정정사구 연서주민수 • 유형별 조례·규칙 보유 건수 • 연도별 조례·규칙 보유 건수
주민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 의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규칙, 훈령, 예규 현황 • 규칙, 훈령, 예규 현행 전체 건수 • 규칙 제정 및 개·폐현황
주민	주민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송 현황 • 주민소송 제기사례
주민	주민소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소환 현황
주민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정보공개사례 • 시도별 정보비공개사례 •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현황 •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 기관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기관별 원문공개율 현황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
조례와 규칙	조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법한 조례 대법원 제소 현황
선거	선거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결과 • 구·시·군의 장선거 결과 • 시·도의회의원선거 결과 •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결과 •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결과 •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결과 • 교육감선거 결과 • 교육의원선거 결과 • 국회의원선거 결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수 • 시도의원수 • 시군구의원수 • 유형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 기수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액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 의원국외여비 예산편성액 • 의원역량개발비 예산편성액 • 시·도의회 의회비 편성 현황(의회비, 여비, 의회운영비, 의원역량강화) • 시·도의회 인건비성 예산 편성 현황 (인건비성 예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민간건강보험부담금) • 시·도의회의원 1인당 의정비 편성 현황(월정수당, 의정활동비) •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시·도의회위원의 의정비 비중(세출예산 중 의정비) • 시·도의회 여비성 예산 편성 현황(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 시·도의회 의회운영비성 예산 편성 현황(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협업체부담금) • 시·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관련 예산 편성 현황(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지방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전국 시·도의회 입법·예산정책 지원인력 현황(입법담당, 예산담당, 전문위원실)
지방의회	지방의원 체포 (부패)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지방의회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 전체 자치법규 규칙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의장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 광역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현황 • 기초의회 의장단 현황
지방의회	부의장	• 광역의회 부의장 현황 • 기초의회 부의장 현황
지방의회	위원회	• 위원회 운영 - 소집횟수, 회기일수, 의안처리, 청원, 구정질문, 총회의시간, 1일평균시간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수 • 위원 수별 상임위원회 수 •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의회별 내역- 광역의회, 기초의회)
지방의회	회의	• 회의 개최 현황(정기총회, 시도대표회의) • 2021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 시·도의회 조례안 발의 현황 - 시도의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조례안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발의현황) • 구정질문 - 기획총무, 재무경제, 보건복지, 도시교통, 환경위생, 건설주택, 시민만방 • 의안처리 • 월별 의사일정 - 정례회의, 임시회의 • 회기 및 의안처리 - 회기, 의안처리사항
지방의회	청원	• 청원통계 - 위원회별 청원 처리 • (소개, 채택, 불채택, 폐지, 철회), 미처리 등
지방의회	징계	•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자료 • 기초의원 징계소속 정당 통계 • 기초의원 징계 유형 통계 • 기초의원 징계 수위 현황

대분류	소분류	기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의원 징계 많은 기초의회 순위 • 기초의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 기초의원 징계 사례
지방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의회 사무기구 현황 • 기초의회 사무기구 현황 •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 • 전국 시·도의회 직원현황 • 전국 시·도议회의 기능별 직원 구성 현황 • 전국 시·도의회 입법·예산정책 지원인력 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 신뢰성(정확성)

-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5의 신뢰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 4.4, SD=0.7), ‘선거결과’(M=4.2, SD=0.7), ‘사무기구와 직원’(M=4.1, SD=0.8)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원 체포’(M=2.6, SD=0.9), ‘징계’(M=2.8, SD=1.0), ‘회의’(M=3.0, SD=0.9)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주민소환’(M=3.1, SD=1.2), ‘주민소송’(M=3.2, SD=1.0), 조례위반(M=3.3, SD=1.0), 징계(M=2.8, SD=1.0)이였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선거(M=4.2, SD=0.7), 지방의회(M=3.6, SD=0.8), 주민(M=3.5, SD=0.9), 조례와 규칙(M=3.5, SD=0.9) 순이였음

〈표 3-8〉 자치입법권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주민	주민투표	3.4	0.7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3.9	0.8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 의견 제출	3.9	0.8
	주민소송	3.2	1.0
	주민소환	3.1	1.2
	정보공개	3.3	0.9
	평균	3.5	0.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3.6	0.7
	조례 위반	3.3	1.0
	평균	3.5	0.9
선거	선거결과	4.2	0.7
	평균	4.2	0.7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4.4	0.7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3.6	0.5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3.4	0.5
	지방의원 체포(부패)	2.6	0.9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4.0	0.9
	의장	3.7	0.7
	부의장	3.6	0.9
	위원회	3.8	0.7
	회의	3.0	0.9
	청원	3.7	0.5
	징계	2.8	1.0
	사무기구와 직원	4.1	0.8
	평균	3.6	0.8
전체 평균		3.5	0.8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접근성(구득가능성)

-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1의 접근성(표준편차(SD)=0.9)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M= 4.3, SD=1.0)이었으며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M=4.2, SD=0.7), ‘지방의회의원 임기’(M=3.9, SD=0.9)이 그 뒤를 이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원 체포’(M=2.1, SD=0.8), ‘주민소환’(M=2.3, SD=0.9), ‘징계’(M=2.3, SD=0.9)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조례위반’(M=3.0, SD=1.2),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M=3.0, SD=1.1), 조례규칙심의회(M=2.9, SD=1.1), 위원회(M=2.9, SD=1.1)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선거(M=3.8, SD=0.8), 주민(M=3.1, SD=0.9), 지방의회(M=3.0, SD=0.9), 조례와 규칙(M=3.0, SD=1.2) 순이었음

〈표 3-9〉 자치입법권 기준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주민	주민투표	2.8	0.7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4.3	1.0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 의견 제출	3.7	0.9
	주민소송	2.8	0.7
	주민소환	2.3	0.9
	정보공개	2.9	0.9
	평균	3.1	0.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2.9	1.1
	조례 위반	3.0	1.2
	평균	3.0	1.2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선거	선거결과	3.8	0.8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3.9	0.9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3.0	1.1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2.8	0.8
	지방의원 체포(부패)	2.1	0.8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4.2	0.7
	의장	3.2	0.8
	부의장	3.1	0.9
	위원회	2.9	1.1
	회의	2.8	1.0
	청원	2.7	0.7
	징계	2.3	0.9
	사무기구와 직원	3.3	0.7
	평균	3.0	0.9
전체 평균		3.1	0.9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지표활용도

- 자치입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2의 지표활용도 (표준편차(SD)=1.1)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 4.1, SD=1.0),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M=4.1, SD=0.8),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M=4.0, SD=0.9)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부의장’(M=2.3, SD=0.5), ‘주민소환’(M=2.4, SD=0.7), ‘주민소송’(M=2.6, SD=0.7)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주민

- 투표’ (M=3.1, SD=1.3), ‘조례위반’ (M=2.7, SD=1.2), ‘지방의원체포(부패)’(M=2.7, SD=1.2),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M=3.2, SD=1.2)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선거 (M=3.9, SD=1.1), 지방의회(M=3.3, SD=1.0), 주민(M=3.1, SD=0.9), 조례와 규칙(M=2.9, SD=1.1) 순이었음

〈표 3-10〉 자치입법권 기준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주민	주민투표	3.1	1.3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3.9	0.9
	규칙의 개정, 제정, 폐지 의견 제출	3.4	1.0
	주민소송	2.6	0.7
	주민소환	2.4	0.7
	정보공개	3.3	1.0
	평균	3.1	0.9
조례와 규칙	조례 규칙 심의회	3.1	0.9
	조례 위반	2.7	1.2
	평균	2.9	1.1
선거	선거결과	3.9	1.1
	평균	3.9	1.1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 임기	4.1	1.0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4.1	0.8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2	1.2
	지방의원 체포(부패)	2.7	1.2
	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4.0	0.9
	의장	3.1	1.1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의회	부의장	2.3	0.5
	위원회	3.8	0.8
	회의	3.1	0.8
	청원	2.9	0.9
	징계	2.8	1.1
	사무기구와 직원	3.8	1.0
	평균	3.3	0.9
전체 평균		3.2	1.1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2) 자치조직권(집행기관)

□ 지표 구성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주요 통계지표는 대분류로 자치경찰기관, 소속 행정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읍·면·동 관련기관으로 나뉘었음
 - 자치경찰기관의 소분류로는 자치경찰, 소방기관이 존재함
 - 소속행정기관의 소분류로는 교육훈련기관, 보건의료기관, 중소기업지도 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이 존재함
 - 사업소 및 출장소의 소분류로는 사업소, 출장소가 존재함
 - 읍·면·동 관련기관의 소분류로는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함

〈표 3-11〉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기존 통계지표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자치경찰기관	자치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현황 • 경찰공무원 현황 • 경찰 공무원 -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소속 •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시내주요기관(경찰·소방관서)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인력 현황 / 시·도 소방관서 현황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소방서 1개서당 담당주민수 /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주민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 지역안전등급 현황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 주민수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지정현황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현황 119 구조대 현황 / 119 구급대 현황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의용소방대 현황 / 의무소방대 현황 /인명구조사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소방시설관리사 현황 소방안전교육 현황 / 소방안전교육사 현황 소방교육기관 교육 현황 시내주요기관(경찰 · 소방관서) 소방 공무원(정원)
소속 행정기관	교육훈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기관 현황(국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교원1인당 학생수(시도/시/군/구), 대학교 수(시도/시/군/구) 대학교 교원수(시도/시/군/구), 대학교 학생수(시도/시/군/구)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시도/시/군/구), 유치원수(시도/시/군/구) 유치원 교원수(시도/시/군/구), 유치원 원아수(시도/시/군/구) 초등학교수(시도/시/군/구), 초등학교 교원수(시도/시/군/구) 초등학교 학생수(시도/시/군/구), 학급당 학생수(시도/시/군/구) 학교교육의 효과(시도),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시도), 일반교육, 사이버교육
소속 행정기관	보건의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 병원명, 설립형태,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단체, 심평원 신고종별구분, 응급지점, 심평원 허가 병상수 등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수 지역별 종별 설립구분별 기관수 지역별 의원 표시과목별 기관수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수
소속 행정기관	중소기업 지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R&D 지원기관 자금지원기관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소속 행정기관	중소기업 지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지원기관 • 창업지원기관 • 판로지원기관
소속 행정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구역별 개황 • 행정구역별 학과수 및 학년별 재적학생수 • 행정구역별 외국인유학생 • 행정구역별 전임교원(외국인) 및 비전임교원 • 행정구역별 입학정원 입학자 및 졸업자 • 대학교 수(시도/시/군/구) • 대학교 교원수(시도/시/군/구) • 대학교 학생수(시도/시/군/구)
사업소 및 출장소	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기구(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기구(시도)
	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출장소, 대도시의 군, 구, 읍면동, 출장소 • 시·도 출장소 현황 • 시·군·구 출장소
읍·면·동 관련 기관	읍,면,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 주민센터 현황 • 행정구역(읍면동)별/관서별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수 - 지방행정관서, 경찰소방관서, 법원검찰관서, 보훈청, 교육청, 우체국관서, 세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타 중앙직속기관, 전화국, 방송사, 신문사, 한국농촌공사, 협동조합 • 시·군·구 및 하부행정기관의 인구 규모별 현황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읍면동 수, 명칭사용 실태)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진흥, 기타) •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규모별 프로그램 현황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 지역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 주민자치회

출처: 연구진 작성

□ 신뢰성(정확성)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5의 신뢰성 (표준편차(SD)=0.7)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자치경찰’(M=4.0, SD=0.6), ‘교육훈련기관’(M=3.9, SD=0.7), ‘보건의료기관’(M=3.9, SD=0.4)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M=2.6, SD=0.8), ‘출장소’(M=3.1, SD=0.4), ‘중소기업지도기관’(M=3.3, SD=1.0)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사무소’ (M=3.4, SD=1.3), ‘중소기업지도기관’ (M=3.3, SD=1.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M=2.6, SD=0.8)이였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자치경찰기관 (M=3.8, SD=0.6), 소속 행정기관(M=3.7, SD=0.7), 사업소 및 출장소 (M=3.4, SD=0.5), 읍·면·동 관련 기관(M=3.0, SD=1.1) 순이었음

〈표 3-12〉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자치경찰기관	자치경찰	4.0	0.6
	소방기관	3.6	0.5
	평균	3.8	0.6
소속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3.9	0.7
	보건의료기관	3.9	0.4
	중소기업지도기관	3.3	1.0
	대학 및 전문대학	3.6	0.5
	평균	3.7	0.7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사업소 및 출장소	사업소	3.7	0.5
	출장소	3.1	0.4
	평균	3.4	0.5
읍·면·동 관련 기관	읍,면,동사무소	3.4	1.3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6	0.8
	평균	3.0	1.1
전체평균		3.5	0.7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접근성(구득가능성)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2.7의 접근성(표준편차(SD)=0.7)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사업소’(M= 3.1, SD=0.7), ‘교육훈련기관’(M=3.0, SD=1.0), ‘대학 및 전문대학’(M=3.0, SD=0.8)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출장소’ (M=2.3, SD=0.8), ‘소방기관’(M=2.4, SD=0.5), ‘자치경찰’(M=2.4, SD=0.5)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교육훈련기관’(M=3.0, SD=1.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M=2.6, SD=1.0), 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소속 행정기관 (M=2.9, SD=0.8), 사업소 및 출장소(M=2.6, SD=0.8), 읍·면·동 관련기관 (M=2.6, SD=0.8), 자치경찰기관(M=2.4, SD=0.5) 순이었음

〈표 3-13〉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자치경찰기관	자치경찰	2.4	0.5
	소방기관	2.4	0.5
	평균	2.4	0.5
소속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3.0	1.0
	보건의료기관	3.0	0.6
	중소기업지도기관	2.6	0.8
	대학 및 전문대학	3.0	0.8
	평균	2.9	0.8
사업소 및 출장소	사업소	3.1	0.7
	출장소	2.3	0.8
	평균	2.6	0.8
읍·면·동 관련 기관	읍·면·동사무소	2.6	0.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2.6	1.0
	평균	2.6	0.8
전체 평균		2.7	0.7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지표활용도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2.7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1.0)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사무소’(M=3.4, SD=0.8), ‘읍·면·동 주민자치센터’(M=3.3, SD=1.4)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중소기업지도기관’(M=2.0, SD=0.8), ‘출장소’(M=2.0, SD=0.6)이었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M=3.3, SD=1.4), ‘교육훈련기관’(M=3.0, SD=1.2)였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읍·면·동 관련기관’(M=3.6, SD=1.1), ‘자치경찰기관’(M=2.8, SD=1.1), ‘소속 행정기관’(M=2.6, SD=1.0), ‘사업소 및 출장소’(M=2.2, SD=0.8) 순이었음

〈표 3-14〉 자치조직권(집행기관) 기존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자치경찰기관	자치경찰	2.9	1.1
	소방기관	2.7	1.0
	평균	2.8	1.1
소속 행정기관	교육훈련기관	3.0	1.2
	보건의료기관	2.9	0.9
	중소기업지도기관	2.0	0.8
	대학 및 전문대학	2.6	1.0
	평균	2.6	1.0
사업소 및 출장소	사업소	2.3	1.0
	출장소	2.0	0.6
	평균	2.2	0.8
읍·면·동 관련 기관	읍·면·동사무소	3.4	0.8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3.3	1.4
	평균	3.6	1.1
전체 평균		2.7	1.0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3) 자치조직권(인사관리)

□ 지표 구성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주요 통계지표는 대분류로 정원/현원/조직, 임용, 의원면직, 파견, 수당, 부패로 나뉘었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의 경우 정원/현원/조직에 관련된 지표가 93개로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많은 편으로 새로운 지표 제안 방향에서 해당 지표

- 들을 광역자치단체 수준이 아닌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겨져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사함
- 또한 임용, 의원면직, 파견, 수당, 부패의 경우 세부 소분류가 유의미하다고 여겨지지 않아 대분류로 진행하였음

〈표 3-15〉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기존 통계지표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정원/현원/조직	e-나라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인구 천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정원/현원/조직	내고장 알리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현원 • 시간선택제 전환 인원 • 임기제 인원 • 여성공무원 현황 • 직종별 현원 • 계급별 현원 • 연령 현황 • 장애인 공무원 • 기술직 이공계 인원 • 평균 총 근무연수 • 정년퇴직 예정인원 • 여성관리자 현황 • 휴직 인원 • 퇴직 인원 • 인사교류 인원 • 7-9급 합격자 인원 • 공무원 정원 • 과장급 이상 비율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정원/현원/조직	통계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현원 • 직종별 현원 • 시도별 현원 • 시군구별 현원 • 일반직공무원 기관별 현원 • 특정직공무원 소방직 현원 • 특정직공무원 교육직 현원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직공무원 자치경찰 현원 • 별정직 공무원 정.현원 •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 • 계약 고용직 공무원 정.현원 • 시도별 연령 • 시도별 학력 • 시도별 공무원 총 근무연수 • 시도별 현직급 근무연수 • 시도별 현직위 근무연수 • 시도별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 • 시도별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 시도별 대우공무원 • 시도별 인사교류 • 시도별 포상 • 시도별 소청심사 • 시도별 평균승진소요년수
정원/현원/조직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공무원 정원 • 주민 1인당 지방공무원 수 • 기관 계층별 공무원 정원 • 직급별 공무원 정원 • 직급별 공무원 현원 • 연도별 공무원 현원 • 연령별 공무원 현원 • 여성공무원 현황 • 지방공무원 휴직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 지역별 신규임용 • 균형인사 임용 • 퇴직공무원
정원/현원/조직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단위 설치 수/ 팀단위 설치 수 • 본청 과단위 평균정원(수) • 전체 과단위 대비 사업소 과단위 비율 • 한시기구 설치수 •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팀 비율 • 본청 과 수 대비 공통지원기능 과 수 비율 • 기준인건비 초과율 • 재정여건 대비 인건비 비율 •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 무기계약직 비율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직 비율 • 정원대비 현원 비율 • 별도 정원 비율 • 유사단체 간 분청인력 비율 • 전체인력 대비 사업부서 인력 비율 • 전체현원 대비 기술직 현원 비율 • 특정직공무원 자치경찰 현원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임용 인원 • 시도별 일반 공무원 임용 • 시도별 전문경력관·일반 임기제·별정직 임용
	의원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퇴직 •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사망, 징계퇴직)
	승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 인원 • 평균승진소요연수 • 시도별 일반직 평균승진소요연수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인원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연가일수 • 평균맞춤형복지 현황 • 출산휴가 인원 • 육아휴직 현황 • 재정규모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부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비율 • 시도별 징계 • 공무원 징계

출처: 연구진 작성

□ 신뢰성(정확성)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3의 신뢰성(표준편차(SD)=0.7)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행정안전부’(M=3.8, SD=0.8), ‘통계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M=3.6, SD=0.8), ‘e-나라지표’(M=3.6, SD=0.8)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파견’ (M=2.7, SD=0.8), ‘수당’(M=2.9, SD=0.6), ‘부패’(M=3.1, SD=0.6)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분석·진단 연구용역’ (M=3.3, SD=0.9)이였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5, SD=0.7), 임용(M=3.3, SD=0.7)순이였음

〈표 3-16〉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정원/현원/조직	e-나라지표	3.6	0.8
	내고장 알리미	3.2	0.4
	통계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3.6	0.8
	행정안전부	3.8	0.8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3.3	0.9
	평균	3.5	0.7
	임용	3.3	0.7
	의원면직	3.2	0.6
	승진	3.2	0.4
	파견	2.7	0.8
	수당	2.9	0.6
	부패	3.1	0.6
	전체 평균	3.3	0.7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접근성(구득가능성)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2.9의 접근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e나라지표’(M= 3.5, SD=0.7), ‘정원/현원/조직-내고장알리미’(M=3.4, SD=0.8), ‘정원/현원/조직-통계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M=3.3, SD=0.9)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파견’(M=2.4, SD=0.7), ‘정원/현원/조직-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M=2.5, SD=0.8), ‘승진’(M=2.5, SD=0.7) 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통계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M=3.3, SD=0.9), ‘부패’(M=2.8, SD=0.9)이였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2, SD=0.8), ‘임용’(M=2.9, SD=0.7), ‘수당’(M=2.9, SD=0.8)이였음

〈표 3-17〉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정원/현원/조직	e-나라지표	3.5	0.7
	내고장알리미	3.4	0.8
	통계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3.3	0.9
	행정안전부	3.1	0.8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2.5	0.8
	평균	3.2	0.8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임용	2.9	0.7
	의원면직	2.6	0.7
	승진	2.5	0.7
	파견	2.4	0.7
	수당	2.9	0.8
	부패	2.8	0.9
	전체 평균	2.9	0.8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지표활용도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2.8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0.7)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행정안전부’(M=3.4, SD=0.7), ‘정원/현원/조직-e나라지표’(M=3.4, SD=1.0)이었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의원면직’(M=1.9, SD=0.6), 승진(M=2.3, SD=0.7)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 용역’(M=2.8, SD=1.0), ‘정원/현원/조직-e나라지표’(M=3.4, SD=1.0)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2, SD=0.8), ‘임용’(M=2.5, SD=0.8)이었음

〈표 3-18〉 자치조직권(인사관리) 기준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정원/현원/조직	e-나라지표	3.4	1.0
	내고장 알리미	3.2	0.6
	통계청-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3.2	0.8
	행정안전부	3.4	0.7
	지방행정연구원 2020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2.8	1.0
	평균	3.2	0.8
임용	임용	2.5	0.8
의원면직	의원면직	1.9	0.6
승진	승진	2.3	0.7
파견	파견	2.4	0.5
수당	수당	2.7	0.5
부패	부패	2.6	0.7
전체 평균		2.8	0.7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4) 자치행정권

□ 지표 구성

- 자치행정권 관련 주요 통계지표는 대분류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로 나뉘었음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소분류로는 구역, 구역경계변경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의 소분류로는 사무배분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소분류로는 협력과 분쟁 조정,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있음

〈표 3-19〉 자치행정권 관련 기존 통계지표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한국행정구역분류(전국 행정구역 현황) •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 행정구역(구별) 토지지목별 현황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수 • 지역별 행정구역 및 출장소 수 • 연도별 행정구역 유형별 수 • 남북한 행정구역 유형별 수 비교 • 행정구역 평균규모 • 인구 규모별 행정구역 •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 이북5도민 •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 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 기초구역군, 기초구역 수 • 지역별 구역번호 할당 및 기초구역설정 • 연도별 국가기초구역 설정 • 지역별 도로명 • 위계별 도로명 • 부여사유별 도로명 • 주소정보시설
	구역 경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행정구역분류(기간별 변경내용)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행정구역 변천 현황)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무처리현황 • 민원서류 처리 건수 • 즉결민원처리 건수 • 유기한 민원 처리 건수 •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현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 •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 시·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

대분류	소분류	기존 지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행정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 (권역별, 기능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내주요기관(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출처: 연구진 작성

□ 신뢰성(정확성)

-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4의 신뢰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 4.0, SD=0.5), '구역 경계변경'(M=4.0, SD=0.5)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사무배분'(M=3.0, SD=0.8)이었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행정협의회'(M=3.1, SD=1.1)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4.0, SD=0.5)이었음

〈표 3-20〉 자치행정권 기존 통계지표의 신뢰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구역	4.0	0.5
	구역 경계변경	4.0	0.5
	평균	4.0	0.5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3.0	0.8
	평균	3.0	0.8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3.1	0.6
	행정협의회	3.1	1.1
	지방자치단체 조합	3.1	1.0
	평균	3.1	0.9
전체 평균		3.4	0.8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접근성(구득가능성)

-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2.9의 접근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3.9, SD=0.8) 였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행정협의회'(M=2.4, SD=0.9)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 경계변경'(M=3.1, SD=1.0)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3.5, SD=0.9)이었음

〈표 3-21〉 자치행정권 기존 통계지표의 접근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구역	3.9	0.8
	구역 경계변경	3.1	1.0
	평균	3.5	0.9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3.0	0.8
	평균	3.0	0.8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2.5	0.9
	행정협의회	2.6	0.5
	지방자치단체 조합	2.4	0.9
	평균	2.5	0.8
전체 평균		2.9	0.8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지표활용도

-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M) 3.3의 지표활용도 (표준편차(SD)=1.0)를 보임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4.6, SD=0.7)이었음
-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행정협의회’(M=2.5, SD=0.9)였음
- 표준편차 기준으로 전문가 간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협력과 분쟁 조정’(M=2.9, SD=1.3)이었음
-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4.1, SD=0.8)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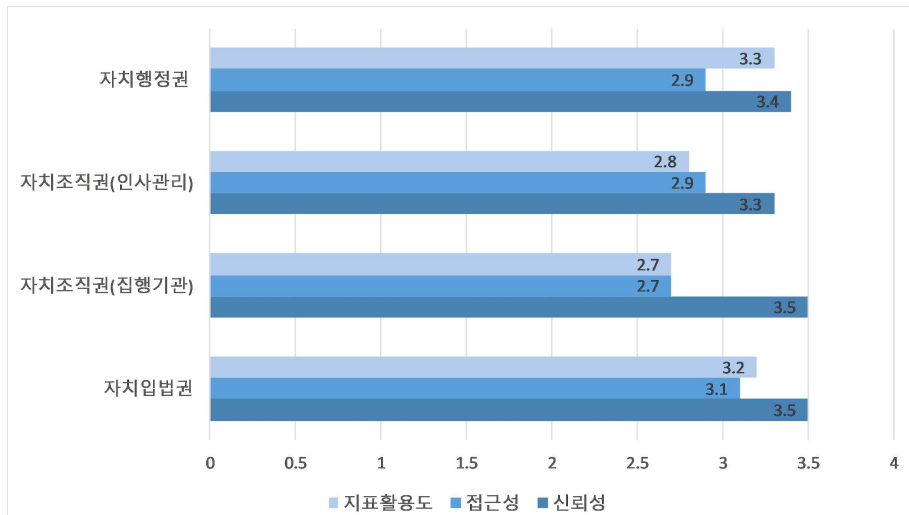
〈표 3-22〉 자치행정권 기준 통계지표의 지표활용도 평가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구역	4.6	0.7
	구역 경계변경	3.6	0.9
	평균	4.1	0.8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	사무배분	3.3	1.2
	평균	3.3	1.2

대분류	소분류	평균	표준편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 조정	2.9	1.3
	행정협의회	2.5	0.8
	지방자치단체 조합	2.6	0.9
	평균	2.7	0.9
전체 평균		3.3	1.0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그림 3-2〉 각 분야별 통계지표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평가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제3절 새로운 통계지표 수요 조사

1.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92.9%, ‘측정가능성 있음’이 평균 93.8%, ‘활용가능성 있음’이 평균 90.4%로 나타남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필요성 있음=100%)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필요성 있음=83.3%)였음
-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위원회별 청원 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지, 철회, 미처리 등)’(측정가능성 있음=100%)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행정사무 감사결과(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등)’(측정가능성 있음=86.7%)였음
-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활용가능성 있음=100%) 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활용가능성 있음=80.0%)였음

〈표 3-23〉 자치입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주민	주민 감사 청구 건수	93.3%	96.7%	90.0%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83.3%	90.0%	80.0%
조례 및 규칙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 (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100.0%	96.7%	100.0%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수, 직위 (급수), 배치부서 등	93.3%	96.7%	93.3%
	사직·퇴직의원수, 자격심사 건수, 자격상실 의원수	90.0%	90.0%	83.3%
	지방의원 부패관련 지표 (기소, 체포 등)	96.7%	93.3%	93.3%
	행정사무 감사 결과(시정,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제출 등))	96.7%	86.7%	93.3%
	위원회별 청원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치, 철회), 미처리	90.0%	100.0%	90.0%
전체 평균		92.9%	93.8%	90.4%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2. 자치조직권(집행기관)

- 자치조직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78.1%, ‘측정 가능성 있음’이 평균 84.2%, ‘활용 가능성 있음’이 평균 77.7%로 나타남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필요성 있음=96.7%)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 성별 등)’(필요성 있음=50.0%)였음
-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측정가능성 있음=96.7%)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 성별 등)’(측정가능성 있음=70.0%)였음
-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활용가능성 있음=96.7%) 이고,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 성별 등)’(활용가능성 있음=53.3%)였음

〈표 3-24〉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장 업무추진비	96.7%	93.3%	93.3%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80.0%	80.0%	73.3%
	실·국장 업무추진비	63.3%	80.0%	60.0%
자치경찰기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96.7%	96.7%	96.7%
	민간참여 소방·안전 활동 수· 참여인원 등 (자방대 등)	80.0%	80.0%	80.0%
소속행정기관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기관)	93.3%	90.0%	86.7%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등)	86.7%	83.3%	80.0%
	지역별 대학이상 취업자수	80.0%	76.7%	76.7%
	교육감 및 부교육감 현황통계	76.7%	90.0%	80.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조직·인사·예산·재산 관련 현황	93.3%	90.0%	93.3%
	교육지원청 담당 학령인구수	90.0%	93.3%	86.7%
읍면동 관련 기관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 (성명, 출생, 성별 등)	50.0%	70.0%	53.3%
	읍면동장 임명방식	73.3%	73.3%	73.3%
	여성읍면동장 비율	76.7%	90.0%	76.7%
	읍면동장 평균 임기	73.3%	83.3%	76.7%
	읍면동장 평균 학력	53.3%	73.3%	60.0%
	읍면동장 평균 연령	63.3%	86.7%	70.0%
	읍면동장 자율편성예산 비중	86.7%	83.3%	86.7%
	읍면동 직급별 인력구성	70.0%	86.7%	73.3%
전체 평균		78.1%	84.2%	77.7%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3. 자치조직권(인사관리)

- 자치조직권(인사관리)의 세 가지 지표의 경우 ‘필요성 있음’이 90.0%, ‘측정 가능성 있음’이 96.7%, ‘활용 가능성 있음’이 93.3%로 나타남
- 필요성(96.7%)과 활용가능성(100%)에서 지역·지방 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측정 가능성의 경우 세가지 지표가 동일하였음 (96.7%)

〈표 3-25〉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인사관리	지역, 지방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	96.7%	96.7%	100.0%
	직급별·직무별 인건비 평균	86.7%	96.7%	90.0%
	공무직 직무, 비율, 인건비 평균	86.7%	96.7%	90.0%
전체 평균		90.0%	96.7%	93.3%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4. 자치행정권

- 자치행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93.5%, ‘측정 가능성 있음’이 평균 90.9%, ‘활용 가능성 있음’이 평균 91.3%으로 나타남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이었음 (모두 100%). 한편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현황’(83.3%), ‘소지역별 자원봉사 관련 통계’(83.3%)였음
-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특별자치단체수·구

성 현황, 의회구성 등’, ‘특별자치단체 기구·인원 등’ 이었음 (모두 100%). 한편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관련(화해·중재 등)’(66.7%), ‘주민총회·마을계획 참여인원 등’(70.0%)였음

-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이었음 (모두 100%). 한편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소지역별 자원봉사관련 통계’(80.0%),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현황’(80.0%)였음

〈표 3-26〉 자치행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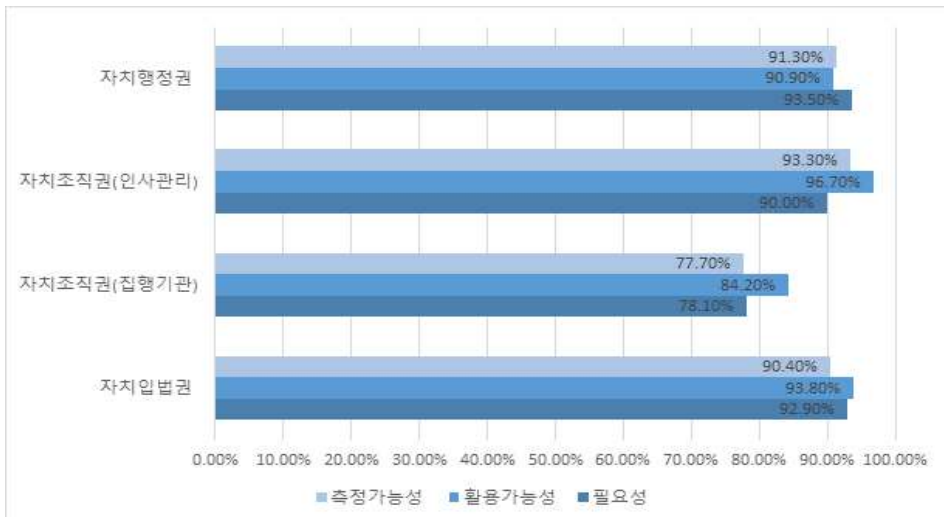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행정구역·사무배분	생활인구(통근·통학·관계인구 등) 수	96.7%	86.7%	96.7%
자치단체 협력제도	특별자치단체수·구성 현황, 의회구성 등	93.3%	100.0%	90.0%
	특별자치단체 사무 (이양)현황, 6대 기능별 예산규모 등	93.3%	96.7%	86.7%
	특별자치단체 기구·인원 등	93.3%	100.0%	90.0%
	자치단체조합수·구성 현황, 사무현황 등	86.7%	93.3%	83.3%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83.3%	90.0%	80.0%
	행정사무위탁 건수 및 액수 등	93.3%	90.0%	86.7%
민관협치 등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및 성별 구성 등	93.3%	96.7%	90.0%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 및 인원·예산 등	93.3%	96.7%	90.0%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100.0%	100.0%	100.0%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100.0%	96.7%	100.0%
	소지역별 자원봉사 관련 통계	83.3%	83.3%	80.0%
	주민자치(위원)회 및 활동현황 등	93.3%	90.0%	93.3%
	공동주택입대위, 사회 복지단체, 소상공인수	96.7%	83.3%	86.7%

분류	신규 제안지표(안)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민관협치 등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100.0%	100.0%	100.0%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100.0%	96.7%	100.0%
	주민총회·마을계획 참여인원 등	86.7%	70.0%	93.3%
	갈등관리 및 공론화 관련(화해·중재 등)	96.7%	66.7%	96.7%
전체 평균		93.5%	90.9%	91.3%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 이상 세 가지 분야의 신규제안지표(안)에 대한 평가 종합은 <그림 3-3>과 같음. 연구진이 제안한 지표를 묶음으로 보았을 때,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행정권(93.5%),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자치조직권(인사관리)(96.7%), 측정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도 자치조직권(인사관리)(93.3%)로 나타남

<그림 3-3> 각 분야별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종합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5.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 종합

〈표 3-27〉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

유형	분류	세부지표
자치입법권	주민, 조례 및 규칙, 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의원별 조례 발의 및 통과 건수 • 계류, 폐기, 가결, 수정가결, 부결 • 광역-기초 간 역할분담 : 광역자치단체-관할 기초자치단체 동일조례 제정 시 역할중복·분담 여부 • 기수별 의정활동 성과(조례 발의건수, 건의안 건수 등 실적) • 단체장 반응성, 선거경합도: (임기 중) 광역·기초단체장 지지율 및 정당지지율 • 부정선거 통계, 조례 유형별 통계(제정, 일부개정, 타법개정, 전면개정, 폐지제정), 전체조례개수 • 의원별 조례발의 건수 의원별/ 초선 재선 다선 별/정당별 등 조례발의 건수 자료 • 입법권의 배분(조례제정권 비율) • 자치입법 독립성/입법: 지자체 간 동일·유사 목적 자치법규의 중복·유사성 관련 정량 지표 • 조례 제정의 성과 평가 • 조례/규칙 발의-제정 평균 소요 기간 • 조례입법 평가제도 도입여부 • 주민 발의 건수, 주민 발의 조례 가결 비율 • 주민소송건수, 주민투표건수(다만 두 개지표는 지금까지 소송과 주민투표가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주민참여예산액, 주민참여예산사업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 • 지자체 의원 1인당 조례 발의 및 처리 건수 • 평균 조례 제정 소요기간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분자유발언, 도정질의 •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 • 사무기구 직원 직급별 비중 • 시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시의원 1인당 조례안 통과 건수 • 읍부즈만 정보 • 의원당 사무인력 수 • 의원별, 상임위별 조례 발의 건수 • 의원연구단체 수, 의원연구단체 수행 실적, 의원연구단체 세부 연구내용 • 의정연구 수행 현황 및 활용 결과의회사무처(국) 인력 통계 • 의회출석률

유형	분류	세부지표
자치입법권	지방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검토위원 활용: 조례(안)에 관한 심의 중 전문검토위원 활용 현황 • 정당별 지방의회 의원구성비율 • 정보공개제도 활용: 의정활동 중 공개 발의에서 청구공개·원문공개된 공문 인용 횟수 • 증거 활용: 의정활동 중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 인용 건수/인급 횟수 (공개 발언, 자치법규 제·개정 사유 등) • 지방의원 국회출장 내역(예산, 출장지, 대상 수)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내역 지방의회 공무원수(전체, 유형별) • 지방의회 구성 현황(지원부서의 수, 인원 등), 지방의회 운영 예산(지원예산 규모 등) • 지방의회 삭감예산 및 삭감액수 • 지방의회 의원 외유일정 • 지방의회 초선, 재선, 중진 비율 •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관련 지표(교육 등) • 지방의회의원별 조례 발의 건수, 통과 건수, 정책지원관 배치 후 퇴직까지 소요, 일수(임기제 만료 이전 퇴직의 경우), 기초지방의회 기준 의회의원 보수결정액 • 지방의회의원의 이해관계 충돌 여부 및 검증자료 • 지역구별 청원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치, 철회), 미처리
자치조직권	자치경찰기관, 소속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외 특수행정자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 소방: 1개월 평균 출동 건수, (경찰 & 소방) 신고접수 후 평균 도착시간 • 경찰관 입직경로 비율 • 경찰인력 수 대비 범죄건수 • 관할기관 담당 주민 수 기관별 정원/현원, 기관 내 부서별 정원/현원 • 소속행정기관 및 사업소 조직 및 인력 현황 • 자치경찰 범칙금 발급건수 • 자치경찰 소관 관할지구대수 자치경찰 수행 사무 수, 자치경찰위원회 제안 수 등 • 자치경찰기관 평균 연봉(지자체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 자치경찰기관 활동 내역 • 자치경찰위원 1인당 담당 인구, 민간참여 소방 참여인원 1인당 담당 인구 •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여부 현황 • 정책학습: 관할 사업 중 우수사례 선정, 타 지역 우수사례 벤치마킹·활용 실적 등 • 조직 구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부서, 업무분장 변경사항 기록 및 최소 5년 이상 보존

유형	분류	세부지표
자치조직권	자치경찰기관, 소속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외 특수행정자치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역내 아동 성범죄 및 강력 범죄자 거주정보 (예: https://www.nsopw.gov/) 직급별 정원, 경력, 정보공개, 제도 연계
자치조직권	읍면동 관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주민센터당 배치되어 있는 평균 공무원 수 읍면동 조직현황 읍면동 민원건수 및 민원처리내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 읍면동 하루 민원인 하루 방문인원, 읍면동 민원센터 만족도 읍면동사무소 별 평균 1일당 민원처리업무 수 읍면동의 인력, 예산, 재산 관련 현황 읍면동장 당 담당 주민 수 읍면동장 주재 토론회/주민공청회 건 수 이동장 현황, 직능단체 현황 일반직 공무원 1명당 담당 지역주민 수, 관할지역 범위(면적) 전보(전출), 관련 업무 읍면동장 직급/경력연수
	지방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장 공약 이행률(%) 봉급 업무추진비 세부내역(만난 사람) 자치단체장 공약 이행률 자치단체장 외유일정 지방자치단체(장) 공직 경력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비율 지방자치단체장 출장건수 초선, 재선, 3선 여부/ 산하기관 임명가능 수 혁신평가, 현안해결, 공약평가
	유관기관 조직·인사관리 (임용, 파견, 수당, 승진, 부패, 면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 가산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합격자 비율 관리직 비율, 만족도, 교육실적 면직 등 징계 관련 회의록 보직경로, 인사감사결과 봉급, 부패 유형별 건수 소속기관 파견 현황 실,국,과 당 공무원 수 유관기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점수 유관기관 교육 현황 인사권 독립 대응(의장임기 등), 지방의정센터 활동

유형	분류	세부지표
자치조직권	유관기관 조직·인사관리 (임용, 파견, 수당, 승진, 부패, 면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평균 수당,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승진 건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직원수 • 지자체-지자체간 인사교류 현황 등 • 직급별 초과근로 현황 • 징계 사유 및 징계 회의록
자치행정권	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문화 및 체육) 인구당 수 •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현황, 배분 사무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의 현황 • 광역사무 위임건수, 자치사무 건수 • 구역별 인구유출입 통계 • 기초지자체별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 • 사무배분 효율화 실적 및 회의내용 • 자치단체 내 인구구성(예: 부양비, 성비, 노령인구비, 등) • 자치단체 면적, 주민 1인당 공무원수 • 지도 감독 사항, 처리 주체 복수, 사무 이양 및 환원 • 지방자치단체 별 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고유사무 분포 현황 • 지방자치단체별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 비율
	자치단체 협력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시군구협의회 조직/인력 현황 통계 • 이양으로 관할이 변화한 사무에 대한 만족도 • 자치단체 간 협업정책 건수 • 자치단체별 mou 개수, 협업체계 회의참석회수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현황 • 지방자치단체조합 회의 참여 실적 • 지자체간 협의회 횟수 및 회의내용 • 특별자치단체 사업 추진 건수 •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지원 예산 비율(또는 규모) •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 가결여부 • 협력사업(예: 공동연구용역 수, 박람회 개최 수 등) 현황 • 협의회, 조합 등 운영현황 관련 활용, 우수 사례, 성과 및 실적
	민관협치 및 시민사회·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문고와 같은 제도 도입여부, 온라인 청원 가능여부 • 기초지자체별 고향세 수입 현황, 활용 현황 • 기초지자체별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액, 영업이익, 고용인원 • 민간전문가 활용: 시민감사관제 등 민간전문가 활용 제도 현황·운영성과 • 분야별 자원봉사인원수(재난복구, 사회복지, 평생교육 등) • 시민단체 협의에 관한 회의내용

유형	분류	세부지표
자치행정권	민관협치 및 시민사회·주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주민 참여 수단의 다양성 정도(예: 오프라인, 온라인, SNS, 등) • 인구 대비 민원제기 건수 • 정보공개율,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등록율 • 주민자치조직 운영 현황 통계, 기관장 간담회 통계 • 주민자치회 인력 및 예산 현황 • 주민자치회별 예산규모 •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예산액수, 참여인원 • 지역안전문화추진 활동 내역(활동 실적, 활동단체 수 등) • 지원 대상 시민사회 조직의 예산자립 수준, 지원 대상 시민사회 조직의 산출 성과 • 참여제도 운영 건수(자치단체 참여제도 현황), 제안 후 사업화 건수, 협치조례, 지원부서 등, 협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핵심가치, 만족도, 재정운영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제4절 새로운 통계지표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1. 통계 플랫폼

□ 지표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양적 불균형)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에 따라 지역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행정 관련 지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는 통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각 자치권별 지표 생산에도 양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자치조직권 중 ‘인사관리’ 관련 지표의 경우 ‘내고장알리미’,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e-지방지표’ 등 다수의 기관에서 동시 생산·관리하여 관련 지표가 충분히 확보된 반면 자치입법권 중 ‘지방의회’ 관련 지표는 관련 지표를 담당하는 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접근가능한 지표 역시 제한적임
- (지표 제공유형) 지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 지자체별 자료제공 유형과 그에 따른 접근 편의성에 차이가 존재하였음. 분석결과 EXCEL, CSV 등 가공가능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73.3%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PDF 형태만 단독 제공(15.3%),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3.6%)하는 경우도 존재하였음. 지자체별 동일한 통계지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표 제공유형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 정책수립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기본통계’의 경우, 다수의 지자체 기본통계가 EXCEL(xlsx, xls), CSV, TXT 형태로 제공되고 통계청 웹사이트에 연계되어 접근 편의성이 확보됨. 그러나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표의 경우 PDF 파일 형태로만 서비스하고 있으며 통계청 웹사이트와 연계되지 않아 이용 편의성에 상당한 제약이 나타남
- (지표 제공범위) 지표 제공범위 분석결과 현재 생산·관리하는 지방행정 관련 지표는 전국 단위 또는 시도 단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실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에 요구되는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통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 시도 유형을 특정한 지표가 160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44.6%) 시군구가 특정되는 유형은 90개 지표(25.1%), 읍면동이 특정되는 유형은 19개 지표(5.3%)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신뢰성) 전문가들에 의해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된 통계플랫폼은 ‘e-지방지표’(59점), ‘e-나라지표’(39점), ‘자치법규정보시스템’(28점)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신뢰성이 높은 지표는 승인통계, 지정통계이지만 시의성과 trade-off 관계에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 다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통계지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통계지표의 시의성이 충족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동시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규범적 방안이 요구되는 바임
- (접근성) 접근성의 경우 전문가들은 ‘e-지방지표’(53점), ‘e-나라지표’(43점), ‘지방재정365’(34점)을 높게 평가하였음. 통계 플랫폼 접근성에 대한 의견 중 ‘자세한 지표가 필요할 때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데이터를 사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서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났음. 이는 현재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가 일원화된 서비스로 제공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는 의견이라 할 수 있음
- (지표활용도) 전문가가 지표활용도의 측면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통계 플랫폼은 ‘e-지방지표’(55점), ‘지방재정365’(38점), ‘e-나라지표’(33점) 순으로 나타났음. 지표활용도의 경우 ‘분석단위와 관련하여 시군단위까지 가공 가능한 수준의 자료가 제한적이며 원하는 형태로의 자료 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지자체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지표 유형 등을 검토하여 사용자의 이용편의도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자치입법권

□ 지표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자료유형) 자치입법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 제공률이 53.0%로 자치조직권(79.1%), 자치행정권(84.6%)보다 낮은 편이 었음. 또한 PDF 단독 제공 혹은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하는 비중 역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임. 이와 같은 결과는 낮은 자료접근성과 PDF 등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형태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의 활 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지표범위) 현재 생산되고 있는 100개의 자치입법권 지표 중 광역자치단체 까지 특정되는 지표가 45개(45.0%), 기초자치단체까지 특정되는 지표가 36개(36.0%) 이며,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18개 (18.0%)임.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특정이 불가능하여 지표 비효율성이 초 래되는 지표는 1개밖에 없음. 따라서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시스템적 지 표 비효율성의 문제보다는 특정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지표가 확산되 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통계유형) 자치입법권의 경우 승인통계가 14개(14.0%), 비승인통계가 86 개(86.0%)로 통계의 제도적 신뢰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으로 판단되 었음. 승인통계 중에서도 지정통계는 존재하지 않아 지표의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판단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신뢰성) 자치입법권 분야 기존 지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평가한 신뢰성은 다른 분야에 비해 평균값이 3.5(SD=0.8)로 높은 편이며, 가장 높은 신뢰성 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 4.4, SD=0.7), 평균값 기준 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원 체포’(M=2.6, SD=0.9)였음.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선거, 지방의회, 주민, 조례와 규칙 등 대분류 모두에서 3.0을 상회하는 높은 신뢰성이 나타남

- (접근성) 전체 평균(M) 3.1의 접근성(표준편차(SD)=0.9)을 보임.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M= 4.3, SD=1.0),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원 체포’ (M=2.1, SD=0.8)였음. 자치입법권 지표의 접근성은 신뢰성, 지표활용도보다 낮게 나타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지표활용도) 평균(M) 3.3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1.0)을 보임.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지방의회의원 임기’(M= 4.1, SD=1.0),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부의장’ (M=2.3, SD=0.5)이었음. 자치입법권 지표 중 주민소환, 주민 소송 등의 지표들도 지표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pdf 등 보고서 형태로만 제시되고 있는 지표 제공 유형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 추측됨

□ 새로운 지표(안)의 쟁점

- 자치입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92.9%, ‘측정가능성 있음’이 평균 93.8%, ‘활용가능성 있음’이 평균 90.4%로 나타나, 다른 세 분야의 지표(안)과 비교하였을 때 ‘필요성’과 ‘측정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위원회별 청원 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지, 철회, 미처리 등)’,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이었음. 조례안에 대한 지표 수요가 높으며, 청원 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측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주민소환투표의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행정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이루어진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에 기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다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향후 주민소환투표의 문턱이 낮아질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측정가능성에서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이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많은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홈페이지나 의정백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다만, 공개되는 결과의 내용이 현재는 단순한 처리 결과 정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내용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처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것으로 보임

□ 지표 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 자치입법권에 대한 신규제안지표(안)을 보면(〈표 3-22〉) 주민과 조례 및 규칙에 비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제안지표가 더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특히 지방의회의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예컨대, 지방의원에 대한 지표 및 사무기구, 특히 2022년도에 신설된 정책지원관에 대한 정보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조례 및 규칙의 처리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전문가의 수요가 높은 것 역시 주목할 점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표 3-27〉) 중 주민, 조례 및 규칙, 선거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면, 조례·규칙에 대한 내용 및 타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지표제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민, 조례 및 규칙, 선거의 경우 앞서 신규제안지표(안)와 마찬가지로 조례·규칙의 처리 등에 대한 지표가 많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 평균 조례 제정 소요기간, 조례발의 건수 및 조례 제정의 성과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함
- 또한 집행부 및 타 지방의회 등 타 기관과의 관계를 통한 자치입법의 확산성, 안정성 등에 대한 사항도 신규지표로 제기됨
- 전문가가 제안한 새로운 지표안(안)(〈표 3-27〉 중 지방의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의원에 대한 지표와 사무기구에 대한 지표로 구분할 수 있음
- 지방의원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의원의 의정활동비, 외유일정, 의원연구단체 및 자치입법 역량이나 성과와 관련된 지표가 주로 제시되고 있음. 이는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사무기구에 대한 지표는 유형별 공무원 수 등 인력에 대한 사항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사무기구에 대한 정보는 현재에도 제공되고 있으나, 그 형태가 활용하기 쉽지 않은 형태(PDF 등)로 제공되거나 혹은 타 지표와 달리 플랫폼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시되기 보다는 개별 지방의회나 협의체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자치조직권

□ 지표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자료유형) 자치조직권의 경우, EXCEL, CSV 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지표가 총 220개 지표 중 174개(79.1%)로 지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집행기관과 인사관리를 분리하여 보았을 때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표범위) 현재 생산되고 있는 220개의 자치조직권 지표 중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제공되고 있는 지표가 100개(45.5%)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제공하는 지표는 29개(13.2%)밖에 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임. 자치조직권의 경우 지표 자체가 생산되고 있지 않다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지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수준을 내려서 확대 생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지표가 생산되고 있으나 자치단체가 특정 불가능한 지표도 39개(17.8%)나 되어, 지표 생산 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표 분야로 나타남

- (통계유형) 자치조직권의 경우 승인통계가 134개(60.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승인통계 비중을 보였음. 이중 일반통계가 112개(50.9%)로 지정통계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다만, 비승인 통계의 비중 역시 70개(31.3%)로 낮지 않아, 승인통계화가 요구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전문가 조사의 경우 집행기관과 인사관리를 나누어서 시행함. 이는 현황 조사 결과, 집행기관과 인사관리의 지표의 전문성 다소 상이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인사관리 지표 중 ‘정원/현원/조직’ 관련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여 플랫폼별로 신뢰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임
- 집행기관 관련 지표
 - (신뢰성) 평균(M) 3.5의 신뢰성 (표준편차(SD)=0.7)을 보임.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자치경찰’(M= 4.0, SD=0.6),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M=2.6, SD=0.8)였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자치경찰기관(M=3.8, SD=0.6)으로 전체적으로 자치경찰기관에 관련된 지표가 높은 신뢰성을 나타냄
 - (접근성) 평균(M) 2.7의 접근성(표준편차(SD)=0.7)을 보여 네 가지 분야 중 가장 낮은 접근성을 나타냄.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사업소’(M= 3.1, SD=0.7),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출장소’(M=2.3, SD=0.8),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

고리는 소속 행정기관(M=2.9, SD=0.8)이었으며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자치경찰기관(M=2.4, SD=0.5)이었음. 자치경찰기관 관련 지표는 신뢰성은 높으나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표활용도) 평균(M) 2.7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1.0)을 보여 네 가지 분야중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나타냄.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읍·면·동 사무소’(M=3.4, SD=0.8),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중소기업지도기관’(M=2.0, SD=0.8)이었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읍·면·동 관련기관’(M=3.6, SD=1.1)이었음. 즉, 지표 신뢰성, 접근성과 지표 활용도 간에 순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함

○ 인사관리 관련 지표

- (신뢰성) 평균(M) 3.3의 신뢰성(표준편차(SD)=0.8)을 보여 네 가지 분야중 가장 낮은 신뢰성을 나타냄.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행정안전부’(M=3.8, SD=0.8),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파견’(M=2.7, SD=0.8)이었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5, SD=0.7)이었음. 전체적으로 ‘정원/현원/조직’에 대한 지표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함
- (접근성) 평균(M) 2.9의 접근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e나라지표’(M= 3.5, SD=0.7),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파견’(M=2.4, SD=0.7)이었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16, SD=0.8)이었음. 신뢰성과 접근성이 동일하게 ‘정원/현원/조직’ 점수가 높았으나 세부 플랫폼은 차이가 있었으며, 지표 제공 유형이 CSV, EXCEL 등 가공 가능한 유형이 많은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지표활용도) 평균(M) 2.8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0.7)을 보여 지표

활용도가 낮은 편이었음.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정원/현원/조직-행정안전부’(M=3.4, SD=0.7), ‘정원/현원/조직-e나라지표’(M=3.4, SD=1.0),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의원면직’(M=1.9, SD=0.6),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정원/현원/조직’(M=3.2, SD=0.8)이었음. 행정안전부와 e-나라지표 모두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지표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새로운 지표(안)의 쟁점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78.1%, ‘측정 가능성 있음’이 평균 84.2%, ‘활용 가능성 있음’이 평균 77.7%로 나타남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필요성 있음=96.70%),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측정가능성 있음=96.7%),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활용가능성 있음=96.7%)이었음
- 반면 각 항목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성명, 출생, 성별 등)’(필요성 있음=50.0%), (측정가능성 있음=70.0%), (활용가능성 있음=53.3%)으로, 읍면동장의 개인 인적 사항은 전반적으로 낮은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지표 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 자치조직권(집행기관)과 관련하여,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부단체장과 관련된 재선·다선비율, 공약이행률, 산하기관장 임면건수, 출장·외유건수, 공직경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등의 신규 지표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측정 및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둘째, 읍·면·동 관련 통계지표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함
 - * 주민과 가장 밀착된 읍·면·동 근린생활권의 자치조직권과 관련된 지표로 각 읍·면·동의 조직·인력·예산(자율편성예산 등)·재산(행정·일반재산 등) 관련 현황, 읍면동 민원 처리 현황 및 만족도, 읍·면·동장의 임기·임명방식·성별구성비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 특히 자치조직권의 측면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현황(조직·인력·예산 등), 이·통장에 관한 현황(연령·성별 구성비·선출방법·임기 등)에 관한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 현재 읍·면·동과 관련된 자료는 상대적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자료의 신뢰도 및 측정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필요한 자료로 볼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3,500여개의 읍면동이 존재하므로 상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구축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치경찰제도의 시행과 아울러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지표로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기관별 및 부서별 정원현원), 소방·안전 활동의 민간참여 활동규모(참여인원 등)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측정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볼 수 있음
 - * 그 외에도 자치경찰 및 소방 관련 신규지표로서 수행 사무의 수 및 자치경찰위원회 제안 수, 자치경찰 소관 관할지구대의 수, 경찰·소방 평균 출동 건수 및 신고접수 후 평균 도착시간 등의 치안서비스 공급관련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음
 - * 넷째, 지역 치안현황 관련 지표로서, 자치경찰위원 1인당 담당 인구, 경찰인력 수 대비 범죄건수, 자치경찰 범칙금 발급건수, 지역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범죄건수 및 범죄자 거주현황 등 경찰청 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가공지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다섯째, 교육자치 분야의 자치조직권 관련 지표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통계로서, 마찬가지로 이를 활용한 지역별 가공통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지원센터 등)의 조직·인사·예산·재산(폐교 현황 등)과 관련된 지역별 통계지표 또는 지역별 가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교육여건과 관련된 지역별 학령인구수, 각급 학교 교원당 학생수, 학생 1인당 교육예산 등의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과 관련 조직·인사·예산 현황, 관련 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표도 생각할 수 있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 정보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평균 3.5(표준편차 0.7)으로 나타났음.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는 ‘자치경찰’(평균 4.0), ‘교육훈련기관’(평균 3.9), ‘보건의료기관’(평균 3.9)인 한편,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평균 2.6), ‘출장소’(평균 3.1), ‘중소기업지도기관’(평균 3.3)였음. 지자체는 전문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 값은 평균 2.7(표준편차 0.7)로 응답 값이 낮게 나타났음.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는 ‘사업소’(평균 3.1), ‘교육훈련기관’(평균 3.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서의 평균 접근성 점수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접근성의 측면에서 자치조직권(집행기관) 지표의 전반적인 점수가 낮은 것을 고려하여, 지표 정보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 담당기관 및 지표제공 플랫폼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셋째,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 정보의 활용도는 전체 평균 2.7(표준편차 1.0)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는 ‘읍·면·동 사무소’(평균 3.4),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평균 3.3)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는 ‘중소기업지도기관’(평균 2.0), ‘출장소’(평균 2.0) 등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지표활용도가 높은 지표들의 체계적인 생산 및 관리가 필요하며,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들의 경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 실시, 지표 활용도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새로운 지표(안)의 쟁점

- 자치조직권(인사관리)의 세 가지 지표의 경우 ‘필요성 있음’이 90%, ‘측정가능성 있음’이 96.7%, ‘활용 가능성 있음’이 93.3%로 나타남
- 필요성(96.7%)과 활용가능성(100%)에서 ‘지역·지방 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측정 가능성의 경우 세가지 지표가 동일하였음 (96.7%)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지표 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치조직권(인사관리)의 현행 지표 체계에 지방행정 유관기관의 인사관리 지표(예. 자치경찰기관, 소속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특수행정자치사무 처리 기관별 정원 및 현원)를 추가하여 지표의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관리 중인 지표와 관련해서는 지표의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여 (예. 임용현황 > 직급별·직무별 임용 현황) 제공함으로써 점차 복잡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는 정보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신규 지표 (예. 직급별·직무별 인건비 평균, 공무원 비율 및 인건비 평균)가 제공될 필요가 존재함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 정보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치조직권(인사관리)과 관련하여 현재 제공되고 있는 총 109개의

지표들 중 43.1%에 해당하는 47개의 지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3.0%에 해당하는 36개의 지표는 자치단체 수준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지표 정보는 자치단체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까지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네 가지의 지표 영역 중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전체 평균 3.3, 표준편차 0.7), 세부 지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2.7에서 3.8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때, 복수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치성 검증, 승인 통계 작성 관련 세부 과정 공개, 개별 지방자치단체 제공 정보에 대한 교차 검증 절차 마련, 수집 정보 정확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 지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셋째,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전체 평균 2.9, 표준편차 0.8), 총 13개의 소분류 중 정원 및 현원과 관련된 지표 이외에 파견(평균 2.4), 승진(평균 2.5) 등과 관련된 소분류에 해당되는 지표들의 접근성이 모두 3.0미만의 평가를 받았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 소분류에 해당되는 지표 정보들이 주로 제공되고 있는 플랫폼인 '내고장알리미'에 대한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넷째,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 정보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전체 평균 2.8, 표준편차 0.7), 정원 및 현원과 관련된 지표 이외에 의원면직(평균 1.9), 승진(평균 2.3) 등과 관련된 소분류에 해당되는 지표들의 접근성이 모두 3.0미만의 평가를 받았음을 고려했을 때, 이들 지표들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 실시, 지표 활용도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4. 자치행정권

□ 지표 현황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자료유형) 자치행정권의 경우, EXCEL, CSV등 가공 가능한 형태의 자료가 전체 39개 지표 중 33개(8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표 수 자체가 적은 것이 문제로 판단됨
- (지표범위) 자치행정권은 ‘읍면동’ 단위의 지표도 7개(16.7%) 생산되고 있는 등 가장 낮은 수준의 자치단위까지 생산이 가능한 지표로 판단됨. 다만 특정 자치단체에서만 생산되는 지표가 8개(19%)로 전체적인 추가 생산의 가능성 및 향후 지표의 난립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 (통계유형) 자치행정권의 경우 승인통계가 10개(25.6%), 비승인통계가 29개(74.4%)로 대부분 비승인통계였음. 승인통계 중에서도 지정통계는 없는 등 통계 신뢰성을 위한 제도화가 시급한 문제로 판단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한 쟁점

- (신뢰성) 평균(M) 3.4의 신뢰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 4.0, SD=0.5),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사무배분’(M=3.0, SD=0.8)이었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4.0, SD=0.5)이었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접근성) 평균(M) 2.9의 접근성(표준편차(SD)=0.8)을 보임.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3.9, SD=0.8),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행정협의회’(M=2.4, SD=0.9)였음.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3.5, SD=0.9)이었음
- (지표활용도) 평균(M) 3.3의 지표활용도(표준편차(SD)=1.0)을 보여 지표활

용도가 높은 편이었음.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 소분류는 ‘구역’(M=4.6, SD=0.7),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소분류는 ‘행정협의회’(M=2.5, SD=0.9),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 카테고리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M=4.1, SD=0.8), 으로 자치행정권 분야에서는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의 기준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새로운 지표(안)의 쟁점

- 자치행정권 신규제안지표(안) 평가 결과, ‘필요성 있음’이 평균 93.5%, ‘측정 가능성 있음’이 평균 90.9%, ‘활용 가능성 있음’이 평균 91.3%으로 나타나, 모든 분야 중에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로 나타남. 특히 각 항목 별로도 100%의 지지를 얻은 지표가 다수를 이루었음
- 필요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이었음 (모두 100%). 측정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특별자치단체수·구성 현황, 의회구성 등’, ‘특별자치단체 기구·인원 등’ 이었음 (모두 100%). 활용가능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지표는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이었음 (모두 100%)
- 종합해보면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은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지지를 받았으므로 도입할 수 있는 지표라고 판단됨
- 다만 ‘소지역별 자원봉사 관련 통계’, ‘갈등 관리 및 공론화 관련(화해, 중재

등), ‘주민 총회·마을계획 참여인원 등(70.0%)’ 등 측정이 어려운 항목들은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도 낮은 지지를 받았음

□ 자치행정권 지표 체계 구성 및 서비스 방안

- 자치행정권과 관련하여 우선 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배분과 관련된 신규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각급 행정기관별로 관련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할구역 및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로는, (특히 읍·면·동별) 인구현황(연령성별 구조 등) 및 인구가동 통계, 생활인구수(통근·통학·관계인구 등), 주민 1인당 공무원수 및 문화체육 공공시설 현황, 정보공개·처리건수, 지도·감독 건수. 자치단체간 국내·외 교류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아울러 사무배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별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고유사무 분포 현황, 읍·면·동 위임·환원사무 및 관련 인력·예산 변동 현황 등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와 관련된 지표들이 제시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음
 - * 행정협의 및 사무위탁과 관련되어 시·도 및 시·군·구협의회 조직·인력 현황, 자치단체간 MOU·협력사업 및 관련 회의개최 건수, 사무위·수탁 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현황(조례 가결여부 포함) 및 조직(특자체의 경우 의회 포함)·인력·예산·사업 관련 현황 국가 위임사무 및 지원예산 규모 등에 관한 지표를 고려할 수 있음
 - *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와 관련된 지표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로서 측정 및 활용가능성이 모두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간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자치행정권에서 마지막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민관협치 및 시민사회·주민참여 관련 신규 지표들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관련 제도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필요성 및 활용가

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측정가능성은 일부 지표의 경우 추가적인 측정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인구대비 온·오프라인 주민제안건수 및 채택률, 참여제도 운영 건수(자치단체 참여제도 현황), 민관협치 위원회 설치건수 및 민간위원 비율, 인구대비 민원처리건수,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예산액수 및 참여인원, 주민세환원 사업 규모, 치안·소방관련 주민참여활동 현황(활동건수, 참여인원 등), 시민감사관제 등 민간전문가 활용제도 운용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영역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및 중간지원조직 현황, 자치단체 및 읍·면·동별 자원봉사 분야별(재난복구·사회복지·평생교육 등) 등록자수·참여자수·시간, 국가 및 자치단체 인가·재단법인 현황, 정부 및 자치단체 지원 시민단체의 수 및 지원규모, 예산자립 현황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 관련되어 자치단체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설치수, 위원수 및 연령·성별 구성, 회의개최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부담 및 정부지원 예산현황, 사업·활동 수), 주민총회·마을계획 참여인원, 마을공동체수(지원내역), 법적 주민조직(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국민운동 4단체, MG·신협 등 지역사회 금융기관 등)의 현황, 읍·면·동별 공유공간 현황(면적, 개소 등), 사회적경제 종류별 기업수·매출·고용현황·사회공헌활동 액수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기타 자치단체의 정보공개율, 갈등관리 윤리경영 추진실적, 사회적가치활동 및 지역 사회공헌활동 건수·액수,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조달건수·액수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액수 및 각 용도별 사용비율 등도 감안할 수 있음

-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정보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평균 3.4(표준편차 0.8)으로 나타났음.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는 '구역'(평균 4.0), '구역 경계변경'(평균 4.0)으로, 가장 낮은 신뢰성을 보인 지표는 '사무배분'(평균 3.0)으로 나타남.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 정보 정확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지표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둘째,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값은 평균 2.9(표준편차 0.8)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값을 기

준으로 가장 높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는 ‘구역’(평균 3.9)으로, 가장 낮은 접근성을 보인 지표는 ‘행정협의회’(평균 2.4)로 나타남. 접근성이 낮은 지표 정보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 담당기관 및 지표제공 플랫폼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정보 제공 경로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이 필요함

- 셋째, 자치행정권 분야의 지표 정보의 활용도는 전체 평균 3.3(표준편차 1.0)으로 나타났음. 평균값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는 ‘구역’(평균 4.6)으로, 가장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는 ‘행정협의회’(평균 2.6)으로 나타남.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지표활용도가 높은 지표들의 체계적인 생산 및 관리가 필요하며, 낮은 지표활용도를 보인 지표들의 경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 실시, 지표 활용도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존재함
- 넷째, 종합하면 자치행정권 관련 지표 중 신뢰성, 접근성, 지표활용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지표는 ‘구역’으로, 세 영역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지표는 ‘행정협의회’로 나타남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개요

- (통계플랫폼) 관련 플랫폼이 통일성 없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함. 각 플랫폼은 복수의 분류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음. 지방행정 관련 통계지표를 찾기 어렵고, 찾더라도 pdf 등 가공이 어려운 형태로 되어있어 이용 가능성이 낮았음
- (통계 지표 제공 유형) 통계지표 자료 제공 유형에서 가공이 어려운 형태인 PDF 단독 제공, 웹사이트 상에서 단독 제공 유형이 약 20% 차지하여 활용 가능성 낮음. 특히 자치입법권 분야의 통계 지표 제공 유형이 가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 (통계 지표 제공 범위) 광역자치단체까지 특정되는 통계지표가 40% 가량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구역을 특정할 수 있음에도 특정하지 않고 있는 '특정 불가능' 유형도 10%를 상회하였음
- (승인통계) 승인통계의 비중 역시 50%를 넘기지 못했으며, 특히 자치입법권 분야는 승인통계가 적었음
- 전반적으로, ①지표의 양적 부족, ②지표 체계의 효율성 부족, ③지표 제공 유형에 따른 편의성 부족, ④지표 제공 범위의 광역자치단체 중심성, ⑤자치입법권 분야의 승인통계 부족 및 지표 가공 가능성 부족 등이 문제로 드러남

□ 통계플랫폼

- 통계청이 관리하는 통계플랫폼인 ‘e-지방지표’와 ‘e-나라지표’가 전문가들¹³⁾이 꼽은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항목에서 8개 통계플랫폼 중 1순위를 차지함. 통계청은 가공가능한 형태의 자료(excel, csv)를 약 90%에 가깝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음
- 전문가들은 ①통계지표 신뢰성과 시의성 간의 trade-off 관계, ②통계 생산 주체의 신뢰성 고려, ③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직접 방문 데이터 활용 경험, ④시군 단위까지 가공 가능한 수준의 자료의 제한성, ⑤통계지표의 일원화된 서비스 방안 강구 필요성 등을 지적함

□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①승인통계의 비중이 낮아 지표의 제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이며, ②시스템적 지표 비효율성의 문제보다는 특정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일부 지표가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¹⁴⁾ 자치입법권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 중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함. 주민소환, 주민 소송 등에 대한 지표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자치조직권

- 자치조직권 분야의 경우, ①현재 존재하는 지표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수준을 내려서 확대 생산하는 것이 요구되며, ②현재 지표가 생산되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특정 불가능한 지표도 많기 때문에 지표 생산 체계의 효율성 문제를 개선해야 하며, ③승인통계의 비중은 높지만 지정통계의 비중이 낮다

13) 2022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 동안 총 30명의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전문가에게 기존 지표 및 새로운 통계 지표에 대한 서면 자문을 실시함

14) 다만 각 분야에 응답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르므로 이하에서는 평가집단의 편향(bias)이 작용하였을 수 있음 (예: 자치입법권 지표를 평가한 전문가들이 자치조직권 지표를 평가한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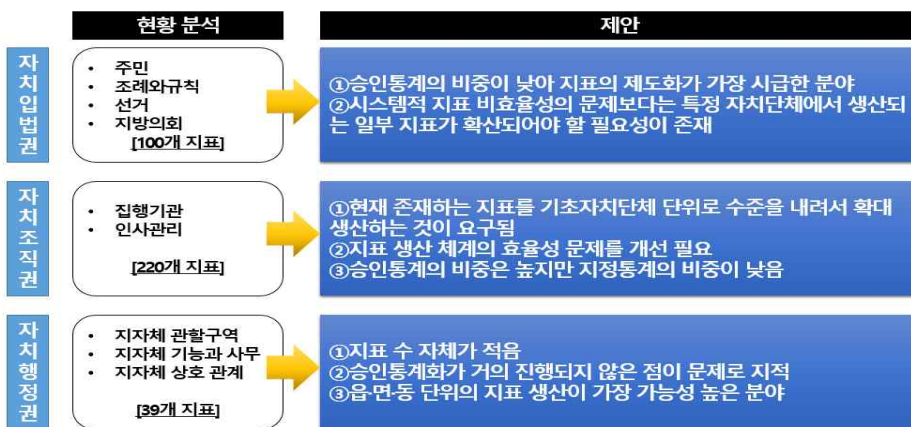
는 문제가 지적됨

- 전문가들은 자치조직권 중 인사관리 지표에 대하여 신뢰성과 지표활용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집행기관 지표에 대하여 접근성과 지표활용도를 낮게 평가함.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플랫폼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e-나라지표가 모두 높은 신뢰성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기관에 대한 지표가 신뢰성이 가장 높고 접근성이 가장 낮았으며, 지표활용도가 가장 높은 분야는 읍·면·동 관련기관이었음

□ 자치행정권

- 자치행정권 분야의 경우, ①지표 수 자체가 적고, ② 승인통계화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③읍·면·동 단위의 지표 생산이 가장 가능성 높은 분야로 판단됨
- 전문가들은 자치행정권 중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관련 지표의 신뢰성·접근성·지표활용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행정협의회 관련 지표의 접근성과 지표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였음

〈그림 4-1〉 각 분야별 현황 분석에 대한 제안



출처: 연구진 작성

2.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새로운 지표 체계 제안

□ 자치입법권

- 자치입법권 분야의 경우, ①다른 분야에 비해 신규제안지표(안)에 대한 필요성과 측정가능성이 높았으며, ②‘조례안 접수, 처리 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 등에 대한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③‘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는 필요성과 활용가능성에서 가장 낮았으며, ④‘위원회별 청원 처리’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높고 ‘행정사무 감사결과’가 측정가능성이 가장 낮을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들은 ‘주민’ 혹은 ‘조례 및 규칙’보다 ‘지방의회’ 관련하여 더 많은 지표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지방의원과 사무기관을 중심으로 요구하였음
- 이러한 경향은 최근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성,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및 사무기구 관련 지표 체계의 비효율성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짐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경우, ①‘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이 가장 필요하고 측정 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꼽혔으며 ②‘읍면동장 개인 인적사항’이 가장 불필요하고 측정과 활용가능성이 낮은 지표로 꼽혔음
- 전문가들은 자치경찰관련 치안 현황 지표, 교육자치 분야의 지역별 가공통계 지표, 평생학습 관련 지표 등을 제안하였으며 자치조직권(집행기관)의 지표 제안의 경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루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과 관련된 지표, ②읍면동 관련 통계지표의 양적·질적 확대, ③교육, 경찰, 치안 등 다방면의 정책분야지표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며, ④지표의 신뢰성은 높지만

접근성과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저해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경우, 기존 지표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진은 세 가지 지표만을 제시하였으며 ‘지역·지방 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이 가장 필요하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나타났음
- 자치조직권(인사관리) 분야의 지표는 향후 ①지방행정 유관기관의 인사관리 지표의 양적 추가, ②현재 관리 중인 지표에 대한 세분화, ③인력관리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의 공개가 요구됨

□ 자치행정권

- 자치행정권 분야는 제안된 신규지표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필요성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00%인 지표들이 대다수를 이루어 가장 지표가 부족한 분야임을 밝힌 연구진의 현황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음
-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등’은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등에서 모두 높은 지지를 받음
- 자치행정권 분야는 향후 ①자치단체 관할구역 및 사무배분과 관련된 신규 지표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②각급 행정기관별로 관련 통계가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서비스될 필요가 있고, ③생활인구, 사무위탁,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및 민관거버넌스와 같이 지방행정에서 최근 각광받는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계가 제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음

〈표 4-1〉 각 분야별·항목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표¹⁵⁾

분류	필요성	측정가능성	활용가능성
자치입법권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등)	위원회별 청원처리(소계, 채택, 불채택, 폐지, 철회), 미처리	조례안 접수, 처리내용(가결, 부결, 폐기, 철회, 미처리등)
자치조직권(집행기관)	단체장 업무추진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자치조직권(인사관리)	지역, 지방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	지역, 지방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 직급별·직무별 인건비 평균 공무직 직무, 비율, 인건비 평균	지역, 지방인재 직급별·직무별 임용 비율
자치행정권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공공시설·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특별자치단체수·구성 현황, 의회구성 등	지역 NGO·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 수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주민참여예산 비율 및 주민세환원액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특별자치단체 기구·인원 등	자치행정 주민제안 건수 및 채택률

출처: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진 작성

15) 해당 지표들은 각 항목별로 90%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지표임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 지방행정통계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등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2010년대 이후 연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통계 현황 분석의 필요성 및 현행 통계 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임
- 통계를 제공하는 통계 플랫폼의 적절성, 시도·시군구·읍면동 등 통계 지표 제공 범위의 현황 파악, EXCEL, CSV 등 가공가능한 통계 지표 제공 유형, 통계의 신뢰성 및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승인통계 제도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와 관련된 통계지표 체계의 새로운 분류로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및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행정권으로 구분한 분류 체계 제시
-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누락·소실 되는 통계 지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표 제공 형태 및 지표 제공 범위의 수정과 승인·지정통계 등 제도적 보완 방안 제시
- 새로운 통계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지표 제공의 우선 순위 및 각 분야 지표 제공의 전략 방안을 구체적으로 구성함

2. 연구의 한계

□ 시공간적 한계

- 본 연구는 2017년 이후에 생산된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전에 생산된 통계지표를 모두 조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제안

된 지표 중에는 여러 이유로 생산이 중단된 통계가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를 조사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수영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모범사례의 수준으로 지표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를 포괄하지 못했고, 새롭게 제안된 지표 중에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기생산하고 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음

□ 주제 범위의 한계

- 본 연구는 새로운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체계를 제안하였으나 해당 통계체계를 서비스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력 및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연구 주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결과임
- 또한 본 연구는 자치재정권 관련 지표는 기본적인 범위 외에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자치재정권 분야 지표의 경우 ‘지방재정365’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가는 단계이며 소요 재원 및 유효 재량권에 관련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과 달리 다양한 논리가 존재하는 까닭으로 자치재정권에 관련된 연구는 후속 연구에 맡기도록 함

□ 전문가 자문의 한계

- 본 연구는 새로운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및 새로운 지표체계 제안에 대한 전문가 서면 자문을 실시하였으나, 시·공간적 한계로 인해 전문가 표본수집(sampling) 및 편향성에 대한 사전 조사(randomness check)을 실시하지 못했음. 또한 신뢰성·접근가능성·활용가능성·필요성 등 통계지표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각 가치에 대한 전문가 간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표본의 수도 이를 상쇄할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편향(bias)이 존재할 수 있음

3. 연구의 활용

□ 연구원 내 향후 보고서의 자료 도출에 활용

- 일부 연구에서 수행되는 일회성·국지적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통계지표들을 활용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1차 자료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2차 자료를 포괄한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연구결과의 도출이 가능함

□ 데이터 관리 조직 및 통계 플랫폼 신설 기초 자료로 활용

- 본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계지표의 생산방법을 고민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생산된 지표들은 어떠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양질의 데이터 공급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를 위한 데이터 전문센터 조직 신설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총조사(가칭)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연구원 차원에서, 지방자치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칭)지방자치 총조사”와 같은 국가승인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가능함
- “(가칭)지방자치총조사”의 경우 본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지표 및 지표 체계를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업무 인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함. 연구의 최근 동향은 담당자의 인식(개인 수준)을 해당 업무에 대한 조직 현황(조직 수준)으로 코딩하고 있음

□ 지방분권지표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본연구는 지방분권 및 자치행정 관련 지표(indicator)를 수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분권 지수(index)로의 발전 토대가 될 수 있음

- 2016년부터 한국일보 지방자치연구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같은 지수 개발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 김동욱(1999). 지역통계행정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37권 1호.
- 김정민(1995). 지역통계의 오차발생과 개선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1호.
- 양영철(2016). 풀뿌리 지역통계의 강화 방안, 공공정책 22-24.
- 이강진,김민경,안전용,최경호(2012). 행정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표적 통계항목 선정 사례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1호.
- 이인실(2012). 한국의 국가통계체계에 대한 소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3호.
- 이재용,고경훈,김정숙(2021).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관리체계 정립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진재현(2013). 지방자치단체 국가승인통계 현황과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 보건복지포럼 52-61.
- 통계청(2022). 통계조정업무매뉴얼.
- 통계청(2022). 2022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 한국교육개발원(202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행정안전부(2021). 2021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인터넷 자료〉

- e-지방지표 <https://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검색일 2022.12.31.)
- 통계청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검색일 2022.12.31.)
- 내고장알리미 <https://www.laiis.go.kr/myMain.do> (검색일 2022.12.31.)
- 행정안전통계연보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13 (검색일 2022.12.31.)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 (검색일 2022.12.31.)

-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검색일 2022.12.3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검색일 2022.12.31.)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https://www.localdata.go.kr/> (검색일 2022.12.31.)
-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검색일 2022.12.31.)
- 지방교육재정서비스 <https://eduinfo.go.kr/> (검색일 2022.12.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 (검색일 2022.12.31.)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https://mpccak.or.kr/> (검색일 2022.12.31.)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https://www.opengirok.or.kr/> (검색일 2022.12.31.)
- 기초의회 징계 잔혹사 2018~2020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JMd1wa-rNPqvEVnD8j424eQXOUWvMw8LY7MxMHO2P4/edit?usp=sharing> (검색일 2022.12.31.)
- ‘행정·안전 관련 통계 328종 한 눈에...’통계 시각화 서비스’시행’,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 SMSTR_000000000008&nttId=84641 (검색일 2022.12.31.)

〈법령 및 규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70호]」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12.27.] [법률 제19108호]」
- 「지방자치법 [2022.1.13.] [법률 제18661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4.27.] [법률 제18851호]」
- 「국가통계포털(KOSIS)운영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 제576호, 시행)」

부록

부록 지방행정 및 자치분권 제도 관련 통계 현황 (2022.12.31.기준)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	e-나라 지표	정부조직/지자체/공무원	.	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2012	2021
2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	.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0	csv, excel	명	시도	1개월	2008	2022
3	통계청	.	.	전국 행정구역 분류 현황(시군구/읍면동)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개월	2008	2022
4	통계청	기관별 통계	행정안전부	시군구별 주민등록세대수	0	웹사이트, excel, csv	명	시군구	1개월	1992	2022
5	통계청	서울 특별시	토지·기후	행정구역(구별)	0	excel, csv, txt	개, %, km ²	특정 시군구	1년	1960	2019
6	통계청	서울 특별시	토지·기후	토지지목별 현황	0	excel, csv, txt	m ²	특정 시군구	1년	1980	2020
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pdf	명	시도	1년	2008	2021
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행정구역	지역별 행정구역	.	excel	건	시도	1년	2001	2021
9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행정구역	연도별 행정구역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	1년	1998	2021
1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행정구역	남북한 비교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	1년	1998	2021
1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행정구역	행정구역 평균규모	.	excel	명, km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	1년	1998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2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행정구역	인구 규모별 행정구역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1998	2021
13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인구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시도)	.	excel	명	시도	1년	1998	2021
14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인구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시도)	.	excel	명	시도	1년	1998	2021
15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인구	시도별 이북5도민	.	excel	명	시도	1년	2021	2021
16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인구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	excel	명	시도	1년	2007	2021
17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인구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	excel	명	시도	1년	2007	2021
18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주민등록세대	지역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	excel	명	시도	1년	2011	2021
19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국가기초구역	기초구역군, 기초구역 수	.	excel	건	시도	1년	2017	2021
20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국가기초구역	지역별 구역번호 할당 및 기초구역설정	.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3	2021
21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국가기초구역	연도별 국가기초구역 설정	.	excel	건	시도	1년	2013	2021
22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도로명	지역별 도로명	.	excel	건	시도	1년	2019	2021
23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도로명	위계별 도로명	.	excel	건	시도	1년	2021	2021
24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도로명	부여시유별 도로명	.	excel	건	시도	1년	2021	2021
25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도로명	주소정보시설	.	excel	건	시도	1년	2017	2021

□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구역 경계변경)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6	통계청	.	.	행정구역분류 - 기간별 변경내용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3개월	2008	2022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7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변천 및 인구현황		pdf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1949	2021

□ 지방자치단체 기능과 사무(사무배분)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8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민원사무처리현황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07	2020
29	통계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행정·사법	민원서류 처리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도	1년	2011	2019
30	통계청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행정·사법	즉결민원처리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도	1개 월	2011	2019
31	통계청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공행정·사법	유기한 민원 처리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도	1개 월	2012	2020

□ 주민(주민투표)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2	공공데이터포털	일반공공 행정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_주민소환투표 관련 정보	.	excel	명	특정 시군구	1년	.	.
33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고시·공고	2022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pdf	명	특정 시군구	불규 칙	2022	2022
34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	주민참여	주민참여- 주민투표 현황(건,투표율)	.	hwp	건, %(투표 율)	특정 시도	1년	2011	2021
35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직접참여 제도	주민참여 - 주민투표 실시사례	.	excel	건	특정 시군구	1년	2005	2021
36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직접참여 제도	주민참여 -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실시사례	.	excel	건	특정 시군구	1년	2021	2021

□ 주민(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7	의안 정보	의안통계	.	서울시 의안 처리현황-조례안 접수, 처리, 처리내용	.	excel	건	특정 시도	.	2002.07.01.	2022
38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	.	자치법규 - 지자체별 현황(조례, 규칙, 훈령, 예규)	.	웹사이트	건	시도	.	.	.
39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	.	자치법규 - 현행전체건수(조례, 규칙, 훈령, 예규)	.	웹사이트	건	시도	.	.	.
4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조례 제정 및 개·폐현황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01.01	2021.12.31
4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조례 재의요구 현황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01.01	2021.12.31
42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조례 재의요구 처리결과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01.01	2021.12.31
4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조례 재의·제소 상세 내역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01.01	2021.12.31
4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현황	.	pdf, excel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4.01.01	2021.12.31
4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	.	pdf, excel	명	시군구	1년	.	.
46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조례·규칙	유형별 조례·규칙 보유	.	excel	건	시도	1년	2013	2021
4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조례·규칙	연도별 조례·규칙 보유	.	excel	건	시도	1년	2009	2021

□ 주민(규칙의 개정과 제정, 폐지 의견 제출)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48	자치법 규정정보 시스템	.	.	자치법규 - 지자체별 현황(조례, 규칙, 훈령, 예규)	.	웹사이트	건	시도	.	.	.
49	자치법 규정정보 시스템	.	.	자치법규 - 현행전체건수(조례, 규칙, 훈령, 예규)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	.	.
50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	자치법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현황 - 규칙 제정 및 개·폐현황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 01.01	2021. 12.31

□ 주민(감사청구)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51	서울 특별시	일반행정	.	서울시민 감사청구 현황 통계	.	excel	건, 명	특정 시도	2006-2010	2006	2010

□ 주민(주민소송)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52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	주민참여	주민소송 현황	.	hwp	건, % (투표율)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21
53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직접참여 제도	주민소송 제기사례	.	excel	건	특정 시군구	1년	2006	2021

□ 주민(주민소환)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54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주민 참여	주민소환 현황	.	pdf	건, %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21

□ 주민(정보공개)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55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청구방법 운영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56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57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처리기간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58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방법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59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교부방법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60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 비공개 사유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61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 불복 신청 및 처리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62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63	정보 공개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종합평가	기관별 원문공개율 현황	.	pdf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1998년	2022년

□ 조례와 규칙(조례 규칙 심의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64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자치 법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현황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 01.01	2021. 12.31

□ 조례와 규칙(조례 위반)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65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자치 법규	위법한 조례 대법원 제소 현황	.	pdf, excel	건	시도, 시군구	1년	2014. 01.01	2021. 12.31

□ 선거(선거 결과)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66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시·도지사선거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67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구·시·군의 장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68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시·도의회의원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69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구·시·군의회의원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70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71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기초의원비례대표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72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교육감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73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교육의원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74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2022년 6월 1일 제1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개표	국회의원선거 개표결과	.	pdf, excel	명	시군구	매 선거	.	.

□ 지방의회(지방의회의원 임기)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75	통계청	서울 특별시	서울 특별시기본 통계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현황	0	웹사이트, excel, csv	명	특정 시군구	매 선거	1998	2020
76	통계청	대구 광역시 북구	공공 행정·사법	국회 및 지방의원 - 국회의원, 광역시도 의원, 자치구 의원	0	웹사이트, excel, csv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20
77	통계청	광주 광역시	공공 행정·사법	국회 및 지방의원 -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0	웹사이트, excel, csv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9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78	통계청	대전광역시	공공 행정·사법	국회 및 지방의원 - 국회의원, 광역시의원, 구의원	○	웹사이트, excel, csv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9
79	통계청	울산광역시	공공 행정·사법	국회의원 및 시, 구·군의원 - 국회의원, 광역시의원, 구군의원	○	웹사이트, excel, csv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19
80	통계청	한국 도시 통계	공공 행정 및 재정	국회의원수 및 지방의원수 - 국회의원수, 시도의원수, 시군구의원수	○	excel, csv, txt	명	시군구	1년	2009	2019
8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의회 의원	유형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	excel	명	시도	1년	2013	2021
82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의회 의원	기수별 지방의회의원 정수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21	2021

□ 지방의회(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83	행정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지방 자치 제도	2022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	.	hwp	만원	시도	1년	2008	2022
84	지방재정 365	지방 재정 통합 공시	항목별 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 (의정운영공통경비)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09	2022
85	지방재정 365	지방 재정 통합 공시	항목별 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15	2022
86	지방재정 365	지방 재정 통합 공시	항목별 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 (의원국외여비)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15	2022
87	지방재정 365	지방 재정 통합 공시	항목별 현황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 (의원역량개발비)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15	2022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88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 의회비 편성 현황 (의회비, 여비, 의회운영비, 의원역량강화)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19	.
89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 인건비성 예산 편성 현황 (인건비성 예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	hwp	백만원, %	시도	1년	2019	.
90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의원 1인당 의정비 편성 현황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	excel, csv, txt	백만원, %	시도, 시군구	1년	2019	.
91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광역자치단체 세출예산 중 시·도의회위원의 의정비 비중 (세출예산 중 의정비)	.	excel, csv, txt	백만원, %	시도, 시군구	1년	2019	.
92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 여비성 예산 편성 현황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	excel, csv, txt	백만원, %	시도, 시군구	1년	2019	.
93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 의회운영비성 예산 편성 현황 (의정운영공동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협의체부담금)	.	excel, csv, txt	백만원, %	시도, 시군구	1년	2019	.
9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광역 지방 의회 DB	시도 의회 현황 자료	2021년 시·도의회 의원 역량강화 관련 예산 편성 현황 (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	pdf	백만원, %	시군구	1년	2019	.

□ 지방의회(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95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	전국 시·도의회 입법·예산정책 지원인력 현황 (입법담당, 예산담당, 전문위원실)	.	pdf	명	시도	1년	2018	2021

□ 지방의회(지방의원 체포(부패))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96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	기관유형별 부패사건 발생·감점 현황	.	hwp	건, %	시도, 시군구	1년	2014	2021

□ 지방의회(행정사무 감사)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97	의안 정보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자료제출 등))	.	hwp	건	특정 시도	1년	2002	2022

□ 지방의회(감사 외 기타 권한 행사 결과)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9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전체 자치법규 (규칙 제·개정 현황)		excel	건	시도, 시군구		1964.08.05	2022.10.10.

□ 지방의회(소집과 회기)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99	통계청	부산광역시수영구	공공 행정·사법	운영현황 - 소집횟수, 회기일수, 의안처리	0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19
100	통계청	대전광역시동구	공공 행정·사법	본회의 운영 - 소집횟수, 회기일수, 본회의일수, 의안처리, 청원, 규정질문, 총회의시간, 1일평균시간	0	excel, csv, txt	건, 일, 시간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6
101	통계청	강원도영월군	공공 행정·사법	회기 및 의안처리 - 회기, 의안처리사항	0	excel, csv, txt	건, 일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13

□ 지방의회(의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02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자료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 명단		hwp	목록	시군구	1년	2013.03.04	2022.03.27
10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의장단 현황(광역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현황)		pdf	명	시도	2년	2008.11.06	2021.03.08.
10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의장단 현황(기초의회 의장단)		pdf	명	시군구	2년	2008.11.06	2021.03.08.

□ 지방의회(부의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0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광역의회 부의장 현황	.	pdf	명	시도	2년	2008.11.06	2021.03.08.
10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부의장 현황	.	pdf	명	시군구	2년	2008.11.06	2021.03.08.

□ 지방의회(위원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07	통계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행정·사법	위원회 운영 - 소집횟수, 회기일수, 의안처리, 청원, 규정질문, 총회의시간, 1일평균시간	0	excel, csv, txt	건, 일, 시간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6
108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상임위원회 설치 의회 수)	.	pdf	명	시도, 시군구	2년	2008.11.06	2021.03.08.
109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위원 수별 상임위원회 수)	.	pdf	명	시도, 시군구	2년	2008.11.06	2021.03.08.
1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의회별 내역-광역의회, 기초의회)	.	pdf	명	시군구	2년	2008.11.06	2021.03.08.

□ 지방의회(회의)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11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료실	.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회의 개최 현황(정기총회, 시도대표회의)	.	hwp	건	시도	1년	2013.03.04	2022.03.27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12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자료실	.	정기총회 및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21년도 건의사항 처리 현황	.	hwp	건	시도	1년	2013.03.04	2022.03.27
113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광역지방의회 DB	시도의회 현황 자료	시·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현황	.	pdf	건	시도	1회	2021.08.21	2021.08.21
114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광역지방의회 DB	시도의회 현황 자료	시·도의회 조례안 발의 현황 - 시도의회의원, 시도지사, 교육감(조례안 제정안, 개정안, 폐지안 발의현황)	.	pdf	건	시도	1년	2018.07.01	2020.12.31
115	통계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행정·사법	구정질문 - 기획총무, 재무경제, 보건복지, 도시교통, 환경위생, 건설주택, 시민민방	O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6
116	통계청	대전광역시 동구	공공행정·사법	의안처리	O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6
117	통계청	강원도 영월군	공공행정·사법	월별 의사일정 - 정례회의, 임시회의	O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13
118	통계청	강원도 영월군	공공행정·사법	회기 및 의안처리 - 회기, 의안처리사항	O	excel, csv, txt	건, 일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13

□ 지방의회(청원)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19	의안정보	의안통계	.	청원통계 - 위원회별 청원 처리 (소계, 채택, 불채택, 폐지, 철회), 미처리 등	.	웹사이트	건	특정 시도	회기별	7대	10대

□ 지방의회(징계)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20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징계 의결 내역 자료	.	excel	건	특정 시군구	.	2018. 07.	2020. 11.
121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소속 정당 통계	.	excel	건	시군구	.	2018. 07.	2020. 11.
122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징계 유형 통계	.	excel	건	시군구	.	2018. 07.	2020. 11.
123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징계 수위 현황	.	excel	건	시군구	.	2018. 07.	2020. 11.
124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징계 많은 기초의회 순위	.	excel	건	특정 시군구	.	2018. 07.	2020. 11.
125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 공개 센터	.	.	전국 기초의원 징계 의결 내역 - 경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 사례	.	excel	건	특정 시군구	.	2018. 07.	2020. 11.

□ 지방의회(사무기구와 직원)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26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지방 자치 제도	광역의회 사무기구 현황	.	pdf	명	시도	2년	2008. 11.06	2021. 03.08.
127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지방 자치 제도	기초의회 사무기구 현황	.	pdf	명	시도	2년	2008. 11.06	2021. 03.08.
128	대한 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시·도 의회 사무 기구 및 직원 현황 (2021. 1. 1. 기준)	시도 의회 현황 자료	사무기구 현황 -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담당관(실)	.	pdf	건	시도	1년	2018	2021
129	대한 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시·도 의회 사무 기구 및 직원 현황 (2021. 1. 1. 기준)	시도 의회 현황 자료	전국 시·도의회 직원현황	.	pdf	명	시도	1년	2018	2021
130	대한 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시·도 의회 사무 기구 및 직원 현황 (2021. 1. 1. 기준)	시도 의회 현황 자료	전국 시·도의회 의 기능별 직원 구성 현황	.	pdf	명	시도	1년	2018	2021
131	대한 민국 시도 의회 의장 협의회	시·도 의회 사무 기구 및 직원 현황 (2021. 1. 1. 기준)	시도 의회 현황 자료	전국 시·도의회 입법·예산정책 지원인력 현황	.	pdf	명	시군구	1년	2018	2021

□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32	서울 정보 소통 광장	업무 추진비	.	서울특별시장 업무추진비	.	excel	건	특정 시도	1개월	2011. 03.	2022. 09.

□ 집행기관(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33	서울 정보 소통 광장	업무 추진비	.	서울시본청 행정2부시장 업무추진비	.	excel	건	특정 시도	1개월	2011. 03.	2022. 09.
134	서울 정보 소통 광장	업무 추진비	.	서울시본청 정무부시장 업무추진비	.	excel	건	특정 시도	1개월	2011. 03.	2022. 09.

□ 집행기관(자치경찰기관(자치경찰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35	경찰청	경찰통계자료	기획조정	전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현황	.	excel, csv, txt	건	시도	.	.	2020
136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경찰공무원 현황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도	1년	2007	2020
137	통계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행정·사법	경찰 공무원 -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 소속	○	웹사이트	명	시도	1년	2011	2020
138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도	1년	2007	2020
139	e-지방 지표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내주요기관(경찰·소방관서)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도	1년	1988	2019

□ 집행기관(자치경찰기관(소방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40	소방청	청단위기관	.	소방인력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41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시·도 소방관서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42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공무원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43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시도)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44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소방서 1개서당 담당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45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46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47	e-지방 지표	안전	안전관리	소방안전교육 이수율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4	2021
148	통계청	안전	안전관리	지역안전등급 현황	○	excel, csv, txt	명	시군구	1년	2015	2020
149	통계청	안전	안전관리	119안전센터 1개센터당 담당 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50	통계청	안전	안전관리	구조·구급대원 1인당 담당 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51	통계청	안전	안전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지정현황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5	2021
152	통계청	안전	안전관리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1
153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여성 소방공무원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54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55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56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119 구조대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57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119 구급대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58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59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의용소방대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60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의무소방대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61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인명구조사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62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63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시설관리자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64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안전교육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65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안전교육사 현황	.	excel	명	시도	1년	1995	2021
166	소방청	통계정보	2022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교육기관 교육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1995	2021
167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내주요기관(경찰·소방관서)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88	2019
168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소방 공무원(정원)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도	1년	1997	2020

□ 집행기관(소속 행정기관(교육훈련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69	중앙공무원교육원	통계정보	정기인사통계	회원기관 현황(국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	pdf	.	특정 시도	.	.	.
170	e-지방지표	교육	.	교원1인당 학생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2
171	e-지방지표	교육	.	대학교 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3	2022
172	e-지방지표	교육	.	대학교 교원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2
173	e-지방지표	교육	.	대학교 학생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2
174	e-지방지표	교육	.	인구 천명당 사설학원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3	2022
175	e-지방지표	교육	.	유치원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0	2022
176	e-지방지표	교육	.	유치원 교원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0	2022
177	e-지방지표	교육	.	유치원 원아수(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0	2022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78	e-지방 지표	교육	.	초등학교수 (시도/시/군/구)	0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0	2022
179	e-지방 지표	교육	.	초등학교 교원수 (시도/시/군/구)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0	2022
180	e-지방 지표	교육	.	초등학교 학생수 (시도/시/군/구)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0	2022
181	e-지방 지표	교육	.	학급당 학생수 (시도/시/군/구)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0	2022
182	e-지방 지표	교육	.	학교교육의 효과(시도)	0	excel, csv, txt	건	시도	2년	2008	2020
183	e-지방 지표	교육	.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시도)	0	excel, csv, txt	건	시도	2년	2008	2020
184	행정 안전부	기타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교육 훈련	일반교육	.	excel	건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5	2021
185	행정 안전부	기타	지방자치인재 개발원 교육 훈련	사이버교육	.	excel	건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6	2021

□ 집행기관(소속 행정기관(보건진료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86	보건 복지부	정책	건강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현황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	웹사이트	건	시도	.	.	2020
187	보건 복지부	정보	현황	전국 공공의료기관 현황 - 병원명, 설립형태, 관계 행정기관, 관계 공공단체, 심평원 신고종별구분, 응급지점, 심평원 허가 병상수 등	.	excel	.	특정 시도	분기	.	2019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88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료통계 정보	의료자원통계	지역별 종별 요양기관수	.	excel	건	시도, 시군구	분기	2018	2022
189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료통계 정보	의료자원통계	지역별 종별 설립구분별 기관수	.	excel	건	시도, 시군구	분기	2018	2022
190	보건 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료통계 정보	의료자원통계	지역별 의원 표과목별 기관수	.	excel	건	시도, 시군구	분기	2018	2022
191	통계청	.	.	보건소(보건의료원포함),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수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1997	2020
192	통계청	서울특별시	보건·사회보장	보건소 및 보건분소(구별)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0	2020
193	통계청	서울특별시	보건·사회보장	보건소 인력현황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1982	2020
194	통계청	서울특별시	보건·사회보장	의료기관(구별)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80	2019
195	통계청	서울특별시	보건·사회보장	의료기관종사 의료인력(구별)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1984	2019
196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현황(정원)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9	2020
197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정원)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1999	2018
198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의약품 제조업소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95	2020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199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의약품 판매업소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95	2020
200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식품위생 관계업소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95	2020
201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공중위생 관계업소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20
202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기관)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4	2017
203	통계청	부산광역시	보건·사회보장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등)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2014	2017

□ 집행기관(소속 행정기관(시험연구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04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	기관/단체	.	시험연구기관	.	excel	건	시도, 시군구	.	.	.
205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데이터셋	.	연구기관 현황(연구개발수행조직수, 연구원수)	.	excel, csv, txt	건, 명	특정 시도	1년	1992	2020

□ 집행기관(소속 행정기관(중소기업지도기관))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06	중소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07	중소 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R&D 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208	중소 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자금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209	중소 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경영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210	중소 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창업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211	중소 벤처24	전국 중소기업 지원기관 조회	.	판로지원기관	.	웹사이트	건	시도, 시군구	.	.	.

□ 집행기관(소속 행정기관(대학 및 전문대학))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12	교육 통계 서비스	대학통계	행정구역별 통계	행정구역별 개황	○	pdf, word, hwp	건, 명	시군구	1년	2021	2022
213	교육 통계 서비스	대학통계	행정구역별 통계	행정구역별 학과수 및 학년별 재적학생수	○	pdf, word, hwp	명	시군구	1년	2021	2022
214	교육 통계 서비스	대학통계	행정구역별 통계	행정구역별 외국인유학생	○	pdf, word, hwp	명	시군구	1년	2021	2022
215	교육 통계 서비스	대학통계	행정구역별 통계	행정구역별 전임교원(외국인) 및 비전임교원	○	pdf, word, hwp	명	시군구	1년	2021	2022
216	교육 통계 서비스	대학통계	행정구역별 통계	행정구역별 입학정원 입학자 및 졸업자	○	pdf, word, hwp	명	시군구	1년	2021	2022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17	e-지방 지표	교육	.	대학교 수 (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건	시도	1년	2003	2022
218	e-지방 지표	교육	.	대학교 교원수 (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2
219	e-지방 지표	교육	.	대학교 학생수 (시도/시/군/구)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7	2022

□ 집행기관(사업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20	통계청	서울 특별시	공공 행정·사업	시내주요기관 (지방행정관서) - 사업소 건수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도	1년	1988	2020
221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지방자치단체 기구 (시군구)	.	excel	건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1998	2021
222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지방자치단체 기구 (시도)	.	excel	건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1998	2021

□ 집행기관(출장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23	통계청	부산광역시	공공행정·사업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 - 출장소 건수	○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95	2019
224	행정 안전부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업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읍·면 출장소(65출장소)	○	pdf	건	특정 읍면동	1년	2008	2021
225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지방자치단체 기구(시군구)	.	excel	건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1998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26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지방자치단체 기구(읍면동출장소)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07	2021
227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기구	지방자치단체 기구 (대도시의 군, 구, 읍면동, 출장소)	.	excel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1998	2021
228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 권실	지방자치제도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시·도 출장소 현황(8출장소)	.	pdf	건	시도	1년	2008	2021
229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 권실	지방자치제도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시·군·구 출장소(14출장소)	.	pdf	건	시도	1년	2008	2021
230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 권실	지방자치제도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읍·면 출장소(65출장소)	.	pdf	건	시도, 읍면동	1년	2008	2021

□ 집행기관(읍,면,동사무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31	공공 데이터 포털	일반공공 행정	지방행정· 재정지원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현황 - 주민센터 현황	.	excel	건	시군구	1년	.	2022.06.22
232	통계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행정· 사법	행정구역(읍면동)별/관서 별 관내 관공서 및 주요기관수	0	excel, csv, txt	건	특정 읍면동	1년	2011	2018
233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 권실	지방자치제도	2021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 시·군·구 및 하부행정기관의 인구 규모별 현황	.	pdf	명, 건	시도	1년	2008	2021

□ 집행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34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	hwp	건	시도, 시군구, 읍면동	1년	2019	2021
235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2012	2020
236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2012	2020
237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규모별 프로그램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2012	2020
238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현황	.	excel	건	시도	1년	2012	2020
239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지원현황(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타)	.	excel	건	시도	1년	2012	2020
240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	excel	건	읍면동	1년	2013	2021
241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	excel	건	시도	1년	2016	2021
242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	excel	건	시도	1년	2013	2021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협력과 분쟁 조정)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43	e-나라 지표	정부조직/지자체/공무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excel	건	국가, 지방총괄	1년	2000	2021
244	통계청	부산광역시	공공행정·사법	외국 자매도시와의 교류현황	0	excel, csv, txt	건	특정 시도	1년	2012	2017
245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자치제도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현황	.	hwp	명	시도	.	2021	2021
246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방행정지원	시·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례	.	pdf	건	특정 시도	.	2019	2019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행정협의회)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47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지방 행정 지원	광역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	excel	건	시도	1년	2021	2022
248	행정 안전부	지방 자치 분권실	지방 행정 지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운영 현황 (권역별, 기능별)	.	pdf, hwp	건	국가, 지방총괄	.	2019	2019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조합)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49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내주요기관(협동조합)	0	excel, csv, txt	건	특정 시군구	1년	1991	2011
250	행정 안전부	지방자치 분권실	지방행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현황	.	pdf	건	특정 시도	.	2018	2018

□ 인사관리(정원/현원/조직)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51	e-나라 지표	정부조직/지자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	excel	명	국가, 지방총괄	1년	2000	2022
252	e-나라 지표	정부조직/지자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	excel	명	국가, 지방총괄	1년	2000	2021
253	e-지방 지표	사회통합	공공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8	2020
254	e-지방 지표	사회통합	공공행정	인구 천명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원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8	2021
255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공무원 현원	0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56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시간선택제 전환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57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임기제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58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여성공무원 현황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59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직종별 현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0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현원	계급별 현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1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기본현황	연령 현황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2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기본현황	장애인 공무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3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기본현황	기술직 이공계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4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기본현황	평균 총 근무연수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5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기본현황	정년퇴직 예정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6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여성관리자 현황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7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휴직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8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퇴직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69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인사교류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70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7-9급 합격자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271	내고장 알리미	조직운영	.	공무원 정원	○	excel, csv, xml	명, %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6	2021
272	내고장 알리미	조직운영	.	과장급 이상 비율	○	excel, csv, xml	명, %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6	2021
273	내고장 알리미	조직운영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excel, csv, xml	명, %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6	2021
274	내고장 알리미	조직운영	.	소속기관 및 읍면동 공무원 비율	○	excel, csv, xml	명, %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6	2021
275	e-지방 지표	사회통합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현원(시도)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8	2020
276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공무원 총괄(정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1997	2019
277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구 공무원 (정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1997	2020
278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동 공무원(정원/구별)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1997	2020
279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본청 공무원(정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2	2019
280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의회, 합의를행정기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정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6	2019
281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공무원(정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3	2015
282	통계청	대구광역시 서구	공공행정·사법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읍면동	1년	2012	2020
283	통계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행정·사법	구의회 공무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2	2020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84	통계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행정·사법	보건소 공무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2	2020
285	통계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행정·사법	보안문화회관공무원	○	pdf, excel, hwp	명	특정 시도	1년	2012	2020
286	통계청	사회통합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현황(시도)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0	2020
287	통계청	강원도 태백시	공공행정·사법	공무원 훈련자 - 직렬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17
288	통계청	강원도 화천군	공공행정·사법	공무원 훈련자 - 훈련별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1	2017
289	통계청	충청남도 공주시	공공행정·사법	공무원 훈련자 - 교육부서주관교육, 기관주관교육, 개인학습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3	2020
290	통계청	전라남도 여수시	공공행정·사법	공무원 훈련자 - 과정별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군구	1년	2012	2019
291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기관별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292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직종별 현원	○	excel, csv, txt	명	국가, 지방총괄	1년	2013	2020
293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현원	○	excel, csv, txt	명	국가, 지방총괄	1년	2013	2020
294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	시군구별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군구	1년	2015	2020
295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일반직공무원 기관별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296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특정직공무원 소방직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297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특정직공무원 교육직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298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특정직공무원 자치경찰 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299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별정직 공무원 정.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3	2020
300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기능직 공무원 정.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01	2012
301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계약 고용직 공무원 정.현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07	2012
302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공무원 연령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03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	시도별 공무원 학력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15
304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공무원 총 근무연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05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현직급 근무연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06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현직위 근무연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07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인사통계	.	시도별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5	2020
308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5	2020
309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대우공무원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10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인사교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11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포상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12	통계청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평균승진소요년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13	통계청	서울특별시	공공행정·사법	퇴직사유별 공무원	○	excel, csv, txt	명	특정 시도	1년	2013	2020
314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역별 공무원 정원	.	excel	명	시도	1년	2007	2021
315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주민 1인당 지방공무원 수	.	excel	명	시도	1년	2007	2021
316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기관·계층별 공무원 정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특정 불가능	1년	2007	2021
317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직급별 공무원 정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7	2021
318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직급별 공무원 현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2	2021
319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연도별 공무원 현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1	2021
320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연령별 공무원 현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2	2021
321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여성공무원 현황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22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방공무원 휴직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2	2021
323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4	2021
324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지역별 신규임용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5	2021
325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균형인사 임용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1	2021
326	행정 안전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	퇴직공무원	.	excel	명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5	2021
327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기구효율성	과단위 설치 수/ 팀단위 설치 수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28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기구효율성	본청 과단위 평균정원(수)		pdf	수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29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기구효율성	전체 과단위 대비 사업소 과단위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30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기구효율성	한시기구 설치수		pdf	수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1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기구효율성	본청 전체 팀 중 본청 과소팀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2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기구부문	사업중심성	본청 과 수 대비 공동지원기능 과 수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3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기준인건비 초과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4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재정여건 대비 인건비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5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재정자주도 대비 인건비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36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무기계약직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7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상위직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8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정원대비 현원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39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별도 정원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40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인력효율성	유사단체 간 본청인력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41	지방행정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사업중심성	전체인력 대비 사업부서 인력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42	지방행정 연구원 2018년 지방자치 단체 조직분석·진단 연구용역	인력부문	사업중심성	전체현원 대비 기술직 현원 비율		pdf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343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특정직공무원 자치경찰 현원	0	excel, csv, txt	명	시도 특정 불가능			

□ 인사관리(임용)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44	내고장 알리미	인사 운영	현원	신규임용 인원	0	excel, csv, xml	명	시도, 시군구	1년	2015	2021
345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인사 통계		시도별 일반 공무원 임용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46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인사 통계		시도별 전문경력관·일반 임기제·별정직 임용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 인사관리(의원면직)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47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인사 통계		시도별 퇴직 (면직(의원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사망, 징계퇴직)	0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11	2020

□ 인사관리(승진)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48	내고장 알리미	인사 운영	인사운영	승진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1년	2015	2021
349	내고장 알리미	인사 운영	인사운영	평균승진소요연수	○	excel, csv, xml	명	시도	1년	2015	2021
350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인사 통계	.	시도별 일반직 평균승진소요연수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 인사관리(파견)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51	내고장 알리미	인사 운영	.	파견 인원	○	excel, csv, xml	명	시도	1년	2015	2021

□ 인사관리(수당)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52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복무·후생복지	평균 연가일수	○	excel, csv, xml	명	시도	1년	2015	2021
353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복무·후생복지	평균맞춤형복지 현황	○	excel, csv, xml	명, 천원	시도	1년	2015	2021
354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복무·후생복지	출산휴가 인원	○	excel, csv, xml	명, %	시도	1년	2015	2021
355	내고장 알리미	인사운영	인사운영	육아휴직 현황	○	excel, csv, xml	명, %	시도	1년	2015	2021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56	내고장 알리미	조직운영	-	재정규모대비 인건비 운영비율	○	excel, csv, xml	명, %	시도,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16	2021

□ 인사관리(부패)

연번	접속 사이트	대분류	소분류	지표명	승인 통계 여부	유형 (pdf/excel 등)	지표 단위 (ex. 명/%)	지표 범위 (시도/시군구)	지표 생산 주기	지표 시작	지표 완료
357	내고장 알리미	인사 운영	인사운영	공무원 1천명 당 비위징계비율	○	excel, csv, xml	%, 건, 명	시도	1년	2015	2021
358	통계청	지방자치 단체공무원 인사통계	.	시도별 징계	○	excel, csv, txt	명	시도	1년	2004	2020
359	행정 안전부	지방 행정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정원	공무원 징계	.	excel	명	시군구 특정 불가능	1년	2007	2021